

학생 운동은 학생들이 학문과 연구의 자유, 대학과 학생의 자치를 추구하면서, 나아가서는 체제와 권력에 대한 비판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정치 사회 운동을 의미한다. 학생 운동은 한국 근현대사에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사회 민주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그 선두에는 언제나 서울대생들이 있었다. 학생 운동에 헌신한 학생들의 희생과 노력은 시대의 아픔이자 값진 유산이었다. 하지만 최근 학생 운동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치 중심의 학생 운동이 크게 약화된 대신, 다양한 새로운 운동들이 등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서울대 학생 운동의 발자취를 ‘선도성’, ‘대중성’,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기존 교사와 학생 운동 관련 연구 성과, 학보 『대학신문』, 교지 『관악』, 학생잡지 『서울대저널』, 기록관 소장 자료, 학생 정치 조직 문건, 일간지, 월간지, 학생 운동 참여자 증언 등을 이용하였다.

## 제 1 절 국대안 파동과 초기 학생 운동(1946~1960년)

### 1) 국대안 파동의 발생

서울대학교는 학생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했다. 1946년 7월 13일 군정청 문교부는 서울대학교 설립을 의미하는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 (이하 국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대안은 발표하자마자 학교 안팎에서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이를 ‘국대안 파동’ 이라고 한다. 2장 1절에서 언급했듯이 재경학생행동동일촉성회(이하 학통) 소속 학생들은 7월 22일 국대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8월부터 각 학교별로 국대안반대 투쟁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통합 당사자인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대학 의학부 학생들도 잇달아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교수들도 국대안에 반대했다. 7월 18일 전문대학교수 단연합회는 국대안 불합작(不合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문대학교수연합회를 비롯하여 조선과학자동맹과 조선교육자협회도 국대안 반대를 선언했다. 국대안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은 1946년 7월 31일 ‘전국 교육자 대회’ 를 개최하고 ‘국립서울대안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를 출범시켰다.

당시 국대안 반대 이유는 7월 22일 학통 성명에서 잘 드러난다. 학통은 국대안을 “학원의 관료화”, “군정의 학원 간섭”, “각 단과대학의 자주성 박탈 조치”이며, 학원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려는 기도라고 비판하였다. 즉 국대안 반대는 대학 자치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대학 자치 문제와 관련하여 국대안이 안고 있던 문제점으로는 첫째 “관선 이사회”가 대학을 운영하는 점, 둘째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과 관선 이사 절반이 미국인이라는 점, 셋째 이사회 강화로 교수회와 학생회가 약해진 점 등이었다. 이 중 관선 이사회가 대학을 운영한 것은 국대안 파동의 핵심 쟁점이었다. 관선 이사회가 대학 운영의 실권을 장악하고 교수 임면을 임의로 하여 학원 자유와 자치를 침해할 수 있었다. 반면 문교부 부장 유억겸이나 차장 오천석은 종합 대학교가 이미 세계 각국에서 공인한 제도라는 점을 근거로 국대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서울대생들이 등록을 시작한 9월부터 국대안 반대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9월 5일 이공학부 교직원 전원(38명)은 신설 학교에 봉직할 의사가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학생들 또한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경성대학 의학부 학생들은 학생대회를 열고 학원 관료화와 비민주화 등을 지적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학부 학생

대회, 5개 전문학교 학생회, 법과대학학생회, 공과대학 학생 대회도 국대안 반대를 결정했다. 국대안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학원 자유와 민주화를 주장하며 조직적으로 등록을 거부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학교 당국은 1946년 9월 11~18일 등록을 실시하였다. 전체 취학 예정 학생 8천2백여 명 중 미등록자만 3천여 명이었다. 학생 등록에 이어 각 단과대학이 개교했다. 9월 18일 8개 단과대학이 개교하였고, 10월 10일에는 상과대학이, 14일에는 의과대학이 각각 개교하였다. 등록과 개교 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국대안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각종 집회와 시위, 동맹 휴업 등을 계속했지만 이를 크게 확산시키지는 못했다.

1946년 11월 22일 좌익계 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이 국대안 파동과 관련하여 4개항의 해결책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첫째 관료 독재적인 이사회를 철폐할 것, 둘째 교수 및 학생 자치를 승인할 것, 셋째 미국인 총장과 처장 등은 사임하고 조선인을 선거로 임명할 것, 넷째 현 조선인 문교부 책임자는 인책 사직할 것 등이었다. 민전 성명 발표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국대안 반대 운동이 다시 거세게 일어났다. 12월 9일 문리과대학 학생들이 민전과 비슷한 내용의 요구를 하면서 동맹 휴학에 들어갔고, 곧이어 법과대학과 상과대학도 동맹 휴학을 했다. 결국 군정청은 12월 18일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군정청은 1947년 2월 3일 개교를 맞이하여 만약 학생 전부가 등교하지 않으면 미등교 학생들을 전원 퇴학시키고 9월 신입생 모집 때까지 학교를 폐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군정청의 국대안 강행에 다시 동맹 휴학으로 대항했다.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 문리과대학예과, 공과대학 등 5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5대학공동대책위원회는 2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일제히 동맹 휴학에 들어갔다. 이 성명에서 학생들은 군정청의 국대안 강행을 “파쇼적 반민주적 조치”와 “식민지 교육 정책”으로 규정하고 요구 조건을 관철할 때까지 “무자비하게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과대학 교수 9명 등 각 단과대학 교수들도 국대안에 반대하며 사임하였다. 학동도 5개 단과대학의 동맹 휴학을 지지하며 연대 투쟁에 나섰다. 서울대생 동맹 휴학에 학동이 가세하면서 동맹 휴학은 서울대를 넘어 서울과 지방 중등학교까지 확산되었다. 2월 4일에는 사범대학, 약학대학, 경북중학교가, 5일에는 의과대학, 의과대학예과, 치과대학, 예술대학이 동맹 휴학했다. 6일에는 연희대학교, 휘문중학교, 중동중학교, 경기공업학교 등이, 7일에는 농과대학, 동국대학, 한성중학교, 동성중학교, 배재중학교 등이 동맹 휴학했다. 이 시기 동맹 휴학에 참여한 학생 수는 57개교 4만여 명

정도였다. 상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교수들도 사임과 불협작(不合作) 성명을 계속했다.

많은 학생이 동맹 휴학에 참여하였지만 모두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건설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1947년 2월 9일 동맹 휴학을 비판하며 학업을 계속하자고 주장했다. 그들은 대신 국립대학교 행정을 조선인에게 이양하고, 3대 단과대학에 내린 휴교령을 철회하고, 교수진과 학교 설비를 확충할 것을 군정청에 요구했다. 전국학련 역시 2월 11일 맹휴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동맹 휴학 배후에 소련과 남로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947년 2월 중순 이후 서울대 교수와 일부 지식인들이 군정청에 국대안 파동 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9개 단과대학 학장들은 러취(Lerche, A. L.) 군정 장관과 국대안 파동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동맹 휴학이 진정될 기미를 보였다. 마침내 3월 5일 동맹 휴학 중인 학생들은 국대안의 폐지가 아닌 시정을 요구하면서 동맹 휴학을 중지하고 등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군정청도 일부 후퇴하여 관선 이사회를 폐지하고 9개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한국인 이사 9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한국인 총장을 임명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입법회의(南朝鮮過渡立法議會)는 국대안 수정안을 1947년 3월 통과시켰다. 개정안 수정안에 따라 5월 26일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였다. 새로운 이사회는 6월 13일 등록 거부와 동맹 휴학으로 제적된 학생들을 모두 복교시키기로 결정했다. 당시 제적당한 학생들은 9개 단과대학 8,040여명 학생 가운데 4,956명 이었고, 그중 약 3,200여 명이 8월에 복교하였다. 이로써 1년 가까이 지속된 국대안 파동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제적당한 모든 학생이 복교한 것은 아니었다. “무조건” 복교를 결정했음에도 실제로는 학교 당국의 복교 “허가”가 있어야 했다. 허가 과정에서 복교를 신청한 학생들 가운데 8백여 명이 학교 당국의 불허 방침으로 복교하지 못했다. 결국 복교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포함하여 1천5백 명 이상이 학교를 떠났다. 300명이 넘는 교수도 파면되거나 사임함으로써 학교를 떠났다. 남은 교수는 140여 명에 불과했다. 좌익 계열 학생과 교수가 신생 서울대학교에서 축출되었고 이는 학내에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켰다. 서울대학교 학생 운동은 이러한 극단적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크게 위축되었다.

## 2) 학생 이념 서클의 등장

국대안 파동을 거치면서 많은 좌익 계열 학생과 교수가 학교를 떠났다. 또한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과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사회 전반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학생들 역시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노골화하는 이승만 정권의 횡포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졌다.

1952년 5월 임시 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정권이 대통령 연임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여 공산당으로 처벌하는 ‘부산 정치 파동’이 발생하였다. 부산 정치 파동 결과, 국회는 이승만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발췌 개헌’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를 목도한 학생들은 부산에서 그 해 6월 16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선언 대회를 열었다.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4학년 학생들이 주동한 이날 집회에 학생 1백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계엄 해제, 국회의원 석방”, “반공, 반파쇼, 민주” 등을 구호로 외치면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 사건으로 주동자 박대완, 김유근, 이문홍 등이 지명 수배 후 체포되어 부산 지구 계엄 군법 회의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부산 정치 파동 직후 학생들의 저항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횡포가 있었지만 1950년대 학생들은 직접 저항하지 못했다. 이는 일차적으로 민주주의보다 반공이 우선이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지만, 아직 운동 주체로서 성숙하지 못한 학생 역량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 이후 각 단과대학이나 학과에서 그 동안 금기시하던 이념 문제를 연구하는 학생 서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학생 이념 서클의 지적인 관심은 민주 사회주의, 비판적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근대화론이나 후진국 발전론 등이 논의의 주류였고, 제3세계 지도자 수카르노, 티토, 나세르, 카스트로 등의 삶과 제3세계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민족주의 역사를 정리한 최문환의 『민족주의의 전개 과정』은 그때부터 1970년대 초까지 필독서였다. 그 밖에 해방 후 전석담이 번역한 『자본론』 1, 2권이나 일본에서 간행한 영국과 독일의 사회 민주주의 이론서들도 헌책방에서 구해 읽었다. 회원은 주로 선배들이 후배들 중에서 ‘의식’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나 고등학교 동창 등 연줄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확보했다. 최소한의 다양성도 허용하지 않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활동은 음성적일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 후반 학생 이념 서클 가운데 대표적인 조직은 정치학과의 신진회(新進會)와 법과대학의 신조회(新潮會)였다. 신진회는 1956년 말 정치학과 학생들이 민병태 교수를 지도 교수로 하여 조직하였다. 김지주, 하대돈, 유한열, 김형열, 서정균 등이 초기 중심 학생이었고, 특히 대구 경북 출신 학생들이 많았다. 회원 5명의 추천을 받으면 가입할 수 있었으며 정기적인 토론회 외에 이동화 등 당시 진보 인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기도 했다. 신진회는 1958년 1월 ‘유근일 필화(筆禍) 사건’으로 일단 해체되었다. 1957년 12월 신진회 회원이었던 유근일이 문리과대학 신문인 『우리의 구상』에 “민주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가 몇몇 구절이 문제가 되어 체포되었다. 이 필화 사건으로 신진회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신진회 소속 학생들이 함께 처벌받았다. 결국 신진회는 1958년 1월 동대문 경찰서 사찰과 형사들의 감시 속에서 공식 해산식을 하였다. 그러나 1958년 10월경 학생들은 신진회 재건을 위한 모임을 갖고 재건된 신진회의 이름을 ‘후진사회연구회’로 변경하였다. 이후 후진사회연구회는 후진국의 경제 발전 문제, 민주주의 정착 문제, 민족 통일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민주 사회주의와 분단 극복이 논의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 후진사회연구회 회원들은 이후 1960년 4·19 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는 민족통일연맹(이하 민통련)을 조직하여 남북 학생 회담과 같은 통일 운동을 추진하였다.

신조회는 남재희 등 법과대학 학생 중심으로 1956년에 조직하였다. 1957년 12월 유근일 필화 사건 이후 거의 활동을 중지했다가 1958년 4월 21일 ‘사회법학회’라는 명칭으로 다시 발족하였다. 사회법학회는 학회의 목적을 “노동법, 경제법, 사회 정책학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지식을 넓히며 학회 활동을 통한 교양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창립 당시 회장은 최상징이 맡았고, 김치선 교수가 지도 교수를 맡았다. 사회법학회는 창립 이후 연구 발표회를 활발하게 개최하였다. 발표 내용은 “경제적 기본권에 관한 제 문제”, “농지 개혁 문제”, “수정 자본주의”, “노동조합 조직과 활동”과 그 외 한국 노동 운동 문제나 사회 보장 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법학회는 이러한 연구 발표회 외에 노동자 실태 조사 등 외부 활동도 진행하였다. 1958년 9월 10~11일 양일 간 인천부 두자유노련의 ‘십장 제도’ 실태에 관해 현지 조사를 하였으며, 10월 29~30일에는 회원 4명이 11차 노총 대회 초청으로 대회를 참관하고 부산 부두 노동자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1959년 영월 탄광을 답사했으며, 1960년 대구 제일모직과 미8군 노무자들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자체가 불온시되어 학교 당국과 사법 당국의 주목을 받고 결국 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도 사회학과를 중심으로 한 ‘농촌사회연구회’가 1958년 이후 비공개 활동을 했다. 이 서클은 4·19 혁명 이후 ‘후진사회문제연구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상과대학의 ‘경우회’는 1950년대 중반에 결성한 서클로 다른 학교 경제학과 학생들과 정기 학술 행사 등을 개최하였다. 경우회는 1968년 통혁당 사건 이후 ‘이론경제학연구회’로 이름을 바꾸기까지 상과대학을 대표하는 이념 서클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 이념 서클 조직이 ‘혁신정당 운동’과 맞물려 만들어졌다. 1956년 10월에 창당한 진보당은 당내 학생 비밀 조직으로 ‘여명회’를 조직하였다. 문리과대학에서도 김주태를 중심으로 여명회 조직을 시도했으나, 서울대 안에 여명회가 어느 정도 조직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1950년대 후반 학생 이념 서클의 등장은 국대안 파동 이후 이념적으로 경직되었던 학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변화는 해방 직후 다양하게 분출하던 지성계의 흐름이 극단적인 반공주의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변화의 더 큰 이유는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독재가 심해지면서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새로운 사회를 희망하며 개혁을 모색하였고 이론적인 대안을 마련하려 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1960년 4·19 혁명과 이후 학생 운동으로 폭발하였다.

### 3) 유근일 필화 사건과 이강석 편입 반대 운동

1950년대 후반 등장한 학생 이념 서클들은 국대안 파동 이후 사라진 학생 운동의 기반을 다시 마련하였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학생 운동을 전개하지는 못했다. 그만큼 학생들의 운동역량은 여전히 미성숙했던 반면 극단적 반공주의를 앞세운 이승만 정권의 억압은 강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학생 운동을 전개하기 이전에도 학생들과 관련한 정치적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1957년에 발생한 유근일 필화 사건과 이강석 편입 반대 운동이다.

1957년 12월 9일 문리과대학 ‘신문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신문 『우리의 구상』에 정치학과 유근일이 ‘모색’이라는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유근일은 한국 사회 성격을 분석하고, 소수 지배층과 광범위한 대중의 대립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민주 사회주의를 주장했다. 그런데 이 글 속에서 언급한 “새로운 형태의 조국”과 “무산대중의 단결”이라는 말

이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이 글의 부제(副題)가 “무산대중을 위한 체제로의 지향”이었기 때문에 파문은 더욱 커졌다. 이 글은 비평이나 연구 논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단정되었다. 문리과대학은 이 신문을 회수하고 편집 학생들을 정학 처분하였다. 신문연구회는 해산되었고 『우리의 구상』은 폐간되었다. 학교 당국은 유근일을 퇴학시키고 경찰은 유근일을 구속하였다. 문교부는 이 글이 대학 내 좌익계 교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필화 사건 발생 후 문리과대학에 “불온” 벽보가 붙고 “빠리”가 살포되었으며, 유근일 필화 사건의 배후가 북한 간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일부 신문사에 유근일과 신진회 회원들이 함께 「적기가(赤旗歌)를 불렀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다. 언론은 “북괴 간첩 접선”, “신진회는 비밀 결사”, “좌경·용공”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이 사건을 크게 부각시켰다. 심지어 국회에서까지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근일의 글과 불온 벽보·빠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근일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진회는 국가를 변란(變亂)하려는 단체로 인정할 수 없으며 문제의 글도 민주 사회주의에 기초를 둔 순수 학술 연구에 불과하다는 판결이었다. 훗날 유근일도 이 글의 부제는 자신이 아닌 학생 편집 기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었으며 자신과 편집 기자의 미숙으로 글 내용이 잘못 전달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극단적인 반공주의가 지배하던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학생들과 진보적 지식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진상이 드러나자 이 사건에 대한 학교와 정부의 과잉 조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유 문제가 공론에 부쳐졌다. 유근일 필화 사건은 초기 학생 운동의 이념적 지향과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잘 보여 준다.

이강석 편입 반대 운동 역시 1957년에 일어났다. 이강석은 당시 국회의장 이기붕의 아들이었는데 1957년 3월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가 되었다. 이강석이 이승만의 양자가 되자마자 그를 법과대학에 편입학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4월 9일 오전 남재희, 이강혁, 김종호 등 법과대학 1·2학년생 약 200여 명이 학생 총회를 개최하였다. 학생 총회에서 법대생들은 이강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학교 당국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9일 오후 학장회의는 이강석의 편입학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이에 반발한 법대생들은 10일부터 동맹 휴학에 들어갔다. 학교 당국은 10일 오전 교수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기정 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며 등교 권유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막연한 결론만 내렸다. 법대생들의 동맹 휴학에 대해 당시 문교부 장관은 “애국지사의 양자를 ‘스페셜 케이스’로 입학시켰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응수했다.

이후 학교 당국은 학생들과 타협을 모색했다. 그 결과 이강석의 편입학을 학생들이 양해하고, 학교 당국은 앞으로 특별 입학을 인정하지 않고 동맹 휴학에 참여한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타협을 했다. 13일에 열린 법과대학 학생 총회에서 이 타협안에 대한 표결을 했으나 부결되었다. 이에 책임을 지고 학도호국단 간부 전원이 사퇴한 후 타협안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박수로 가결되었다. 끝까지 타협안에 반대하던 학생들은 가결 직전 모두 퇴장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타협안이 통과된 후 학생들은 15일부터 동맹 휴학을 풀고 정상적으로 등교하였다. 그러나 이강석의 편입학을 반대하는 학생은 여전히 많았고 결국 이강석은 자진해서 학교를 떠났다. 법대생들의 이강석 편입 반대 운동은 성공하였다. 이강석 편입 반대 운동은 단순히 학생 한 명을 배척한 사건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당시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권력과 지위의 남용을 비판하고 학내에서 민주적 의견 수렴을 요구한 사건이었다.

물론 유근일 필화 사건이나 이강석 편입 반대 운동을 본격적인 학생 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두 사건은 모두 1950년대 후반 학생들의 비판 의식이 점차 성장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 준다. 이렇게 성장한 비판 의식은 학생들이 1960년 4·19 혁명과 이후 학생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 제 2 절 ‘선도적’ 학생 운동의 전개(1960~1979년)

### 1) 4·19 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은 극단적 반공주의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계속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모순은 심해지고 민심은 이승만 정권에 등을 돌렸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은 이미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드러났다. 진보당 대통령 후보 조봉암의 선전과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당선은 이승만 정권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 이승만 정권은 더 폭력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지키려 했다. 1958년 1월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 1959년 7월 조봉암을 사형시켰다. 1958년 12월에는 국가보안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야당과 언론을 강하게 통제했다. 그리고 1960년 3월 15일 실시한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은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케 하려고 ‘4할 사전 투표’, ‘3인조·5인조 공개 투표’, ‘야당 참관인 축출’ 등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정을 자행했다.

이승만 정권의 노골적인 민주주의 파괴 앞에서 그 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던 학생들이 저항하기 시작했다. 먼저 움직인 학생들은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었다. 2월 28일 대구에서 야당의 선거 유세가 있자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유세 참가를 금지하려고 일요일인데도 학생들의 등교를 지시했다. 이에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은 ‘학원의 자유’, ‘학생들의 정치 도구화 반대’ 등을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3월 15일 선거 당일에도 마산 지역 학생들은 시민들과 함께 부정 선거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학생 저항은 3월 15일 마산 시위에서 실종된 고등학교 입시생 김주열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후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3월 방학을 마치고 4월 개강한 서울대생들도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기 위해 움직였다. 김주열 시신이 발견된 직후 4월 15일 정치학과 3학년 학생들은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결의하고 4월 21일에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하였다. 주로 1950년대 후반 후진사회연구회(신진회의 후신)에서 활동하던 항쟁 주도 학생들은, 각 단과대학은 물론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등과도 사전 연락을 취해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정치학과 합동 연구실에서 격문 4천 매와 구호 전단 4천 매를 프린트하고, 플래카드 8장을 준비했다. 준비한 구호는 “데모가 이적이냐, 폭정이 이적이냐”,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라.”, “대한민국 생명선은 대법원에 달려있다.”, “민주주의 바로잡아 공산주의 타도하자.”, “이놈 저놈 다 글렀다. 국민은 통곡한다.” 등이었다.

그런데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먼저 시위를 하다가 정치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항쟁 주도 학생들은 4월 21일로 예정한 대규모 시위를 19일로 이틀 앞당겼다. 1960년 4월 19일 전국 각지의 학생이 부정 선거를 규탄하며 일제히 대규모 항쟁을 개시하였다. 서울대생들은 항쟁의 최선두에 섰다. 19일 오전 8시 50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게시판에 격문이 나붙었다. 문리과대학과 이웃한 법과대학, 미술대학, 의과대학 등 각 단과대학 게시판에도 똑같은 격문이 일제히 나붙었다.

여기 대학의 양심은 증언한다. 우리는 보다 안타까이 조국을 사랑하기에 보다 조국의 운명을 염려한다. 우리는 공산당과의 투쟁에서 피를 흘려온 것처럼 사이비 민주주의 독재를 거부한다.

조국에의 사랑과 염원이 맹목적 분격에 흐를까, 우리는 얼마나 참아왔는가.

보라! 갖가지의 부정과 사회악이 민족적 정기의 심판을 받을 때는 왔다. 이제 우리는 대학의 양심으로 일어나노니 총칼로 저지 말라. 우리는 살아 있다. 동포의 무참한 살상 앞에 안일만을 탐할쏘냐! 한숨만 실쏘냐! 학도여, 우리 모두 정의를 위하여 총궐기하자.

교정에 있던 학생들이 격문에 시선을 쏟고 있을 때, 종로5가 쪽에서 고등학생 시위대가 함성을 지르며 동승동 쪽으로 몰려왔다. 대광고등학교 학생 1천여 명이 경찰의 저지선에 부딪히자 종로5가에서 혜화동 방면으로 방향을 바꿨던 것이다. 고교생들의 함성에 자극받은 문리과대학 학생들은 마로니에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9시 10분 항쟁 주도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선언문, 격문, 구호 등을 학생들에게 배부하였다. 9시 20분 드디어 문리대생 2백여 명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거리에 나섰다. 곧이어 법과대학, 미술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수의과대학, 치과대학 학생들과 나머지 문리대생들이 합류하였다. 모두 3천여 명의 시위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태평로에 있던 국회의사당을 향해 달려갔다. 거의 같은 시각 문리과대학 옆 동성고등학교에서도 학생 1천여 명이 시위에 나섰고, 9시 30분에는 사범대생 1천여 명, 상대생 2천여 명이 각각 교문을 나섰다. 특히 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 6백여 명은 흰 가운을 입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며 시위에 나섰다.

10시 30분 경찰 저지선을 뚫고 문리과대학·법과대학·미술대학 학생들이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다. 20분 뒤에는 사범대학 상과대학 학생들이 도착했다.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학생들은 연좌 시위를 벌였고 학생 대표들은 연단에 올라 열변을 토했다. 11시 40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동국대학 시위대가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경무대로 방향을 틀자, 그 바로 뒤로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한 서울대생들과 성균관대학교,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따라나섰다. 오후 1시경 대다수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시위에 나서고 시민들까지 적극적으로 합류하여 서울 시내의 시위 군중이 10만 명을 훨씬 넘어섰다. 경무대로 향한 시위대도 경찰 저지선을 하나씩 돌파하며 점차 경무대에 접근하였다.

오후 1시 40분, 탈취한 소방차를 앞세운 시위대와 경찰 최후 저지선의 간격이 10여 미터로 줄었을 때 경찰의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경찰의 무차별 총격에 시위대 행렬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잠시 후 시위대는 동국대생들을 선두로 대열을 정비하고 다시 경무대 앞으로 나아갔다. 경찰은 거듭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후 동성고생, 연세대생 등이 시위에 합류하였고 경찰 발포 역시 계속 이어졌다. 경찰은 경무대뿐만 아니라 중

양청 앞, 서대문 이기봉 집, 태평로 파출소, 을지로 내무부, 동대문 경찰서 등에서도 발포하였다. 시위대도 이승만 독재의 상징이었던 서울신문사와 반공회관 등을 불태웠다. 4월 19일 시위는 비상계엄령을 발동하고 군대가 서울에 주둔하면서 일단 진정되었지만 이날 서울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경찰의 발포로 사망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도 문리과대학 김치호, 미술대학 고순자, 법과대학 박동훈, 사범대학 유재식, 손중근, 상과대학 안승준 등 6명이 희생당했다.

계엄령 발동 이후 정부는 전국 각급 학교에 임시휴교령을 내렸고 집회를 일체 금지했다. 하지만 4월 25일 이번에는 전국 각 대학교 교수 258명이 서울대 교수회관에 모여 문리과대학 이희승 교수 등이 작성한 시국 선언문을 채택한 후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섰다. 교수들이 시위에 나서자 학생들 역시 하나 둘씩 스승의 행렬에 동참했고 그 인원은 1만 명을 헤아렸다. 교수단은 국회의사당에 도착하여 시국 선언문을 다시 한 번 낭독하고 만세 삼창과 애국가를 부른 뒤 해산하였다. 이날 교수단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이승만 하야’를 분명하게 요구했다. 4월 19일 대규모 시위 당시에도 간간이 이승만 하야 구호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부정 선거 규탄과 재선거 실시가 주된 구호였다. 하지만 교수단에서 ‘이승만 하야’를 분명하게 요구하면서 이승만 하야는 항쟁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다. 다음날인 4월 26일 아침부터 학생들과 시민들은 다시 결집하였다. 10만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세종로에서 중앙청까지 도로를 꽉 메우고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했다. 결국 이날 10시 30분 이승만 대통령은 학생 대표들과 면담한 후 국민 요구에 굴복하여 하야성명을 발표했다. 12년 이승만 독재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학생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독재 정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무너뜨렸다. 학생들이 4월 19일 전개한 항쟁은 이로 인해 4·19 혁명이 되었다. 4·19 혁명은 1964년 6·3 항쟁, 1980년 5·18 광주 항쟁, 1987년 6·10 항쟁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다. 또한 4·19 혁명은 학생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계기였다. 물론 당시 학생들은 조직적이지 못했고 구체적인 지향도 뚜렷하지 않았다. 학생보다 하층 노동자나 무직자 등 기층민중의 희생이 더 많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4·19 혁명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결국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 스스로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역사의 주체로 등장했다. 이 경험은 이후 학생 운동이 발전하는 원동력이었다.

## 2) 4·19 혁명 직후 계몽 운동과 통일 운동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를 종식시킨 학생들은 이후 본격적으로 학생 운동을 전개하였다.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은 먼저 학원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우선 학생들은 어용적인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명실상부한 학생 자치 조직인 학생회를 건설하였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어용 교수들의 축출을 요구했다. 상과대학의 경우 1960년 5월 4일 학생 총회를 개최하고 어용 교수 축출을 요구했다. 어용 교수 축출 문제는 교수들 사이의 파벌 대립까지 겹쳐 매우 혼란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미술대학과 문리과대학에서도 학장 배척 운동이 일어났다.

학원 민주화 운동 이후 학생들은 다시 학교 밖으로 눈을 돌렸다. 1960년 6월 10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국민 새생활 운동, 국민 계몽 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여학생회는 여성 신생활 운동을 문리과대학은 “농촌으로 가기” 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단과대학별로 국민 계몽 운동 조직을 결성하였고, 7월 6일에는 서울대학교 국민계몽대가 결대식을 갖고 “새나라 새터에 새살림”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가행진을 했다. 국민계몽대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7월 8일부터 서울과 부산 등 도시에 새생활 운동반을, 농촌에 국민계몽반을 각각 파견하였다.

서울에서 활동한 새생활운동반은 “망국 사치품 건국 국산품”, “한 개비 양담배에 불타는 우리 조국”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다방, 카바레를 찾아다니며 양담배, 커피 배격과 국산품 애용을 호소했다. 이들은 회수한 양담배 2천여 갑을 세종로에서 소각하고 공휴일에 사적인 용무로 유흥지에 나온 공무 차량을 적발하였다. 부산, 대구, 마산 등의 지방 도시에서도 동일한 활동을 했다. 이는 자립 경제를 확립하려고 한 활동이었다. 각 농촌에 파견된 국민계몽반은 농민을 계몽하고 4·19 혁명의 민주 정신을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활동을 했다. 특히 7월 29일에 실시할 총선거를 공정하게 치루기 위해 농민들에게 선거의 의미와 선출 방법 등을 계몽하였다.

여름 방학 종료와 함께 농촌 계몽 운동은 일단 중단되었다. 그러나 새생활 운동은 2학기 개강 이후에도 서울에서 계속 벌였다. 9월 22일 3백여 국민계몽대 학생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하여 ‘가넘버’ 차를 적발했다. 학생들은 특권층들이 가넘버 차를 불법으로 운용하여 탈세를 범하고 군수품을 도용한다고 비판하면서, 새생활 운동 입법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새생활 운동을 전체 학생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8월 23일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 대표와 좌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9월 24일 58

개 고등학교 6,700명이 모여 국민계몽대 지휘 아래 새생활 운동을 함께 벌일 것을 결의했다. 사범대학에서도 전국 사범대생 계몽연맹을 조직하였다. 국민계몽대는 1960년 겨울 방학에도 도시에 새생활운동반, 농촌에 농촌계몽반을 파견하였다. 서울에서 활동한 새생활운동반은 크리스마스(新正)에 허례허식 일소를 위한 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계몽 운동은 노력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구조화한 사회적 모순을 관념적인 계몽 운동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학생들은 1960년 7·29 총선에서 참패한 혁신 세력과 4·19 혁명을 완수할 수 없는 민주당 정권을 지켜보면서 계몽 운동의 한계를 깨닫고 분단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4·19 혁명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던 신진회 등 이념 서클 출신 학생들은 국내외 이슈로 부상하고 있던 통일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1960년 11월 18일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이하 민통련)을 결성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민통련을 결성한 이후 다른 대학교도 민통련을 속속 결성하였다. 민통련은 당시 한국 사회가 지닌 여러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분단에서 찾고 통일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통일 운동은 학생들을 4·19 혁명의 대의 안으로 묶어 주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민통련이 주도한 첫 번째 학생 운동은 1961년 2월 '한미 경제 협정 반대 운동'이었다. 1961년 2월 8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미 경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미국에게 한국 정부의 경제 운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2월 12일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7개 대학교 민통련은 서울대학교 국민계몽대 등과 제휴하여 '한미 경제협정반대 전국학생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14일 성토 대회를 열었다. 단지 내정 간섭 문제에 국한하여 싸우던 대다수 사람들과는 달리, 민통련 학생들은 한미 경제 협정을 미국의 한국 예속화 조치로 판단하였다. 민통련 학생들은 제3세계 민족 해방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분단과 빈곤에 대한 미국 책임을 질타하였다. 하지만 한미 경제 협정 반대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아직 민통련의 역량과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민통련은 1961년 3월부터 '2대 악법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2대 악법이란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을 말한다. 한미 경제 협정 반대 운동 이후 일련의 시위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장면 정권은 반공주의를 고수하고 각종 시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 두 법안을 제정하고자 했다. 각 정당과 사회 단체들은 즉각 두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장면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난하였다. 학생들 역시 민통련을 중심으로 악법반대전국학생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학생들은 2대 악법이 통과되면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

다. 2대 악법 반대 운동은 이전 한미 경제 협정 반대 운동보다도 더 큰 참여와 열기 속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민통련은 사실상 학생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1961년 4월 19일, 즉 4·19 혁명 1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생들은 민통련 주도로 4·19 제2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학생들은 독재에 대한 저항과 자유에 대한 향수만 언급하던 1년 전 선언과는 달리, 현실을 타개할 운동 방향으로 반봉건, 반외세, 반매판의 3반(反)과 민주, 통일, 민족 자주를 제시했다. 1961년 5월 3일 서울대학교 민통련은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북한 학생들에게 남북 학생 회담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5월 5일 17개 대학교 민통련을 연합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이하 민통전학련)이 결성 준비 회의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문은 철저하게 제3세계 민족 해방론의 관점에서 씌었다.

서울대학교 민통련의 남북 학생 회담 제안과 전국 연합 조직인 민통전학련 결성은 분단 이후 극단적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장면 정권과 보수 진영은 학생들의 남북 학생 회담 추진을 힘으로 막으려 했다. 일반 학생들은 찬반 양론이 엇갈린 가운데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였다. 하지만 민통련의 남북 학생 회담은 내부 논의와 준비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 제안된 것이었다. 민통련은 남북 학생 회담 제안이 예상 밖의 파문을 일으키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민통련 주도 학생들은 남북 학생 회담이 정치적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 학생 교류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또 이 회담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담의 가부(可否)를 투표에 부치자고 뒤늦게 제의하였다. 5월 13일 서울에서 재야 중심의 ‘민족자주통일 협의회’(이하 민자통)가 남북 학생 회담을 지지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 서울대학교 민통련은 학생 운동의 순수성을 이유로 이 집회에 불참하였다. 결국 민통련 주도 학생들은 내부적으로 남북 학생 회담 제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고, 장면 정권 인사들과도 비공식적으로 만나 이러한 결정을 전달하였다. 민통련의 남북 학생 회담 제안은 주체의 힘과 객관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통일 운동이었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군사 정권은 민통련 주도 학생들을 체포하거나 투옥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 내내 통일 운동은 용공(容共)으로 몰려 금기시되었다.

4·19 혁명 이후 민통련이 추진한 통일 운동은 반공주의와 같은 냉전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분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비록 당시 학생들의 주

체적 역량 부족과 극단적 반공 이데올로기가 통일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장애였지만, 이를 계기로 학생 운동의 이념적 지향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로 자리 잡았다. 1964~1965년 6·3 항쟁과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을 거치면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학생 운동의 이념적 지향은 더 분명해졌다.

### 3) 6·3 항쟁과 한일 회담 반대 운동

1961년 5·16 쿠데타로 민통련 중심의 통일 운동은 완전히 중단되었지만, 4·19 혁명 이후 고조된 민족주의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1962년 6월 벌인 한미 행정 협정 체결 촉구 시위는 학생들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잘 보여 준다. 1962년 6월 6일 고려대생들이, 6월 8일 서울대생들이 한미 행정 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하며 5·16 쿠데타 이후 최초로 학생 시위를 벌였다. 시위의 발단은 1962년 봄 미군이 임진강 부근에서 나무꾼을 살해한 사건이었다. 사건 직후인 1962년 3월 서울대생들은 이 문제가 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이른바 '대전 협정'의 불평등성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대전 협정을 대체하는 한미 행정 협정을 조속하게 체결할 것을 박정희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학생들의 요구는 군사 정권과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정치 관여를 인정하지 않아 일단 좌절했다. 하지만 5월 말 파주에서 미군 장교 등 6명이 절도 혐의로 한국 소년에게 폭행을 가해 결국 그 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 1962년 6월 8일 학생 1천여 명이 문리과대학에 모여 미군의 폭행 치사를 규탄하고 한미 행정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였다. 학생들은 선언문 낭독 직후 학교 밖으로 나와 가두 행진을 벌이려 했으나 헌병들이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47명이 연행되었다.

한일 행정 협정 체결 촉구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은 1963년 10월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이하 민비연)를 결성하고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민비연은 합법적으로 학생 운동 기반을 확대하고 학생 운동의 새 방향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연구 발표와 세미나를 통해 민족주의와 관련한 학술적·이념적 지표를 세우자 했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의 한일 협정 체결 시도에 비판적이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취약한 정권의 정통성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를 위해 일본 자금을 들여오려 했다. 또한 1960년대 들어와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미국이 압력도 한층 강해졌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조속한 한일 회담 타결을 시도했

고 최대 쟁점이었던 청구권 액수에 합의한 이후 한일 협정은 거의 타결 직전에 이르렀다.

하지만 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의 한일 협정 체결을 굴욕 외교라고 비난했다.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채 무상 원조 3억 달러 정도로 해양 주권선인 ‘평화선’을 팔아넘기는 박정희 정권에 학생들은 분노했다. 1963년 말부터 민비연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일 회담 반대 시위를 준비했다. 그 결과 1964년 3월 24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학생 5천여 명이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에서 문리대생들은 제2의 이완용을 자처한 정부 측 한일 협상 대표 김종필의 허수아비 인형을 화형시켰다. 이날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한일 회담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과 시민은 총 8만여 명이나 되었다. 25일과 26일에도 많은 학생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특히 26일에는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하면서 시위 규모가 서울에서만 2만 5천 명으로 불어났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1964년 3월 27일 마지막 한일 협상을 위해 일본에 머문 김종필을 급히 한국으로 소환하였다.

4월에 들어와 민비연 학생들에게 북한과 관련한 것처럼 보이는 정체 불명의 괴소포가 배달되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는 그 동안 학생 서클로 위장한 수사 기관의 학원 사찰 기구인 YTP, 즉 청사회(靑思會)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러한 공작 정치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5월 11일 “돌격 내각”이라고 부르는 정일권 내각을 출범하면서 한일 협정 체결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비례하여 학생들의 저항 의지도 더욱 강해졌다. 5월 20일 문리과대학에 서울대학교,



그림 5-3-1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모습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5개 학교 학생 4천 명이 모여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던 박정희 정권을 직접 겨냥했다.

대회장에는 “축(祝)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고 쓴 만장이 펼쳐이는 가운데, 건(巾)을 쓰고 죽장(竹杖)을 잡은 네 명의 학생이 민족적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관을 메고 입장하였다. 학생들은 선언문에서 반외세, 반독재, 반매판의 민족 민주 정신을 분명히 하였고 조사(弔辭)에서 박정희 정권을 통렬하게 풍자, 비판했다. 장례식이 끝나자 학생들은 관을 앞세우고 교문을 향해 나아갔고 이화동 삼거리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했던 이날의 시위는 많은 연행자와 부상자를 낳았다. 이제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은 단순한 회담 반대 운동에서 벗어나 반정부 운동으로 발전했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학생과 정부의 충돌은 격해졌다. 정부는 민비연을 민통련과 관계 있는 사회주의 찬동자로 규정했다. 또 미술대학에 경찰을 투입하여 시위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생들을 대량 검거, 구속했다. 심지어 시위 학생들을 선처한 법원에 무장 군인들이 난입하기도 하였다. 학생들도 5월 23일 법과대학 시위, 5월 25일 전국 31개 대학교 학생 대표가 모여 ‘난국 타개 학생 총궐기 대회’를 하는 등 저항을 계속하였다. 특히 문리과대학학생회는 5월 30일 ‘자유 쟁취 궐기 대회’를 열고 시위 주동 학생에 대한 징계와 정부의 반민주적 처사를 규탄한 뒤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처음 20명으로 시작한 단식은 다른 단과대학 학생까지 가세하면서 6월 2일 그 수가 20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집단 단식 농성은 이전 학생 운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투쟁 방식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6월 3일 드디어 학생들은 각 단과대학에서 성토 회의를 열고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오전 10시 30분 의대생 200명이 시청 앞에서 시위한 것을 비롯해, 농과대학, 상과대학, 사범대학, 음악대학, 약학대학 등 학생 2천여 명이 각양각색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누볐다. 약대생 300명은 성토 대회 후 교문 밖으로 진출하다가 250명이 연행되었고, 치대생 300명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 농성을 했는데 경찰이 강제 해산했다. 사대생 400명도 구호를 외치며 신설동 방면으로 진출했으며, 농대생들도 수원에서 170리를 도보 행군하여 서울 시위에 합류했다. 오후 4시 50분 문리대생 400여 명이 단식을 그치고 교문을 나와 종로5가로 향했고 여기에 법대생 200여 명이 합세하였다. 이날 서울대학교 뿐만 아니라 18개 대학교 1만여명의 학생들이 함께 시위에 나섰다. 구호도 “박정희 정권 하야”로 모였다. 시위대는 중앙청으로 진출한 뒤 다시 청와대 쪽으로 돌파를 시도했

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밤 9시 40분 서울시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군대를 동원하여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였다. 이날의 대규모 시위가 바로 '6·3 항쟁'이다. 박정희 정권은 6·3 항쟁의 책임을 물어 6월 7일 서울대학교 총장을 경질하였다.

계엄령 발동 이후 긴 겨울을 보낸 학생들은 1965년 4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을 벌였다. 1964년은 문리과대학이 중심이었다면, 1965년은 법과대학이 중심이었다. 1965년 4월 3일 한일 협정을 가(假)조인하자, 4월 10일 법대생 500여 명은 '매국 외교 반대 성토 대회'를 한 후 가두시위를 벌였다. 4월 13일 시위가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등 다른 학교로 확산하였다. 이날 시위에서 동국대생 김중배가 경찰봉에 맞고 이틀 후에 사망하였다. 15일 법대생은 다시 학생 총회를 열고 매국 외교를 규탄하는 5일 간 단식 투쟁을 벌였다. 16일 상대생도 '한일 회담 반대 성토 대회'를 갖고 50명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17일 사대생도 성토 대회를 개최했다. 긴장이 계속 고조되자 16일 법과대학의 휴교에 이어, 사범대학도 17일부터 휴교했다. 법과대학의 경우 학장 요청으로 경찰이 학내로 들어와 단식 농성 중이던 학생 39명을 모두 연행하였다. 그러나 27일 농과대학, 29일 문리과대학은 성토 대회와 시위를 계속 벌였다.

잠시 조용하던 학교는 5월 하순 다시 시위 열기에 휩싸였다. 5월 18일 법과대학, 사범대학, 문리과대학에서 한일 회담 반대 시위가 있었다. 특히 법대생들은 지난달 학교에 경찰을 투입시켜 학생들을 연행하도록 한 학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20일 법과대학 학생들은 학생 총회를 열어 동맹 휴학을 결의하고 학원 자유 보장과 학생 사찰 금지 등을 요구했다. 학교 당국은 동맹 휴학 주동 학생을 대량 징계했다. 24일 법과대학 학생들은 학장의 사임을 요구하며 동맹 휴학에 들어갔다. 31일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였다.

6월 12일 법대생들은 5월의 동맹 휴학을 마무리하고 한일 협정 반대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4일 법대생들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단식 투쟁 열기는 다른 단과대학으로 퍼져나갔다. 19일에는 단식 중인 법과대학 학생 232명 이외에, 문리대생 63명, 상대생 320명, 사대생 20명이 추가로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에 학교 당국은 예전보다 20일이나 빠른 6월 21일부터 여름 방학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일 회담의 정식 조인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대학교 등 시내 12개 대학교 학생과 3개 고등학교 학생 1만여 명이 가두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22일에는 13개 대학교가 단식 농성과 함께 시위를 계속했다. 하지만 경찰의 대규모 진압 작전으로 캠퍼스를 벗어나지 못한 채 많은 학생들이 연행되었다. 학생 운동 사상 전무후무한 200시간 단식 농성도 혈서와 함께 마무리되었다.

한일 협정 조인 후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은 비준 반대 운동, 비준 무효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7월 3일 의대생 200여 명은 '한일 협정 비준 반대 성토 대회'를 열었다. 12일에는 서울시내 16개 대학교 교수 345명이 「한일 협정 비준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8월 14일 국회가 비준안을 변칙적으로 통과시키자, 17일 법과대학 학생회는 비준안 국회 통과 무효 선언식을 갖고 18일 성토 대회를 열었다. 8월 21일 긴 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개학하자 곧바로 법과대학과 문리과대학은 각각 성토 대회를 열었다. 24일에는 11개 단과대학 학생 2,500명이 문리과대학에 모여 성토 대회를 갖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은 다른 대학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두 1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25일에도 문리과대학에 1,500명이 모여 성토 대회를 가진 뒤 가두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같은 날 고려대학교에 무장 군인이 난입한 뒤 정부는 다음날 서울 지역에 위수령을 내렸다. 27일 정부는 학원 혼란의 책임을 물어 서울대학교 총장을 다시 경질하였다. 그리고 학교 전체는 29일부터 휴교에 들어갔다. 이것으로 2년 동안 지속하던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은 막을 내렸다.

1964~1965년에 걸친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은 4·19 혁명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장기간 진행했다. 처음에는 민비연을 중심으로 연계를 했지만, 뒤로 갈수록 다양한 학생 조직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던 것은 4·19 혁명 이후 활성화한 학생회, 학회 등 여러 학생 조직의 활동 덕분이었다. 4·19 혁명 이후 학생들 사이에 뿌리내린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념적 지향 역시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의 원동력이었다. 한일 협정 체결을 막지는 못했지만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은 학생 운동이 민족 민주 운동의 중심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였다.

#### 4) 3선 개헌 반대 운동과 교련 반대 운동

1960년대 이후 학생 운동은 민비연과 같은 학회가 중심이 되었다. 당시 학회는 대개 단과대학별로 조직되었고 회원 수는 학년별로 대략 10여 명 정도였는데 3학년 선배가 신입생을 개별 면담한 후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뽑았다. 세미나의 커리큘럼은 학회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분단 문제,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신식민지 지배, 매판 자본 등 현실적인 문제에서 제3세계 역사, 세계사, 한국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었다. 카(E. 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 황성모의 『현대사회사상사』, 최문환의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등이 세미나용 주요 도서였다. 민비연 이후 1960

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서울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학생 운동을 주도 한 학회는 ‘한국사회연구회’, ‘이론경제학회’, ‘후진국사회연구회’, ‘문우회’, ‘사회법학회’ 등이 있었다. 운동 주도 학생은 학회를 통해 재생산되었고, 이들은 각 단과대학을 단위로 학생회나 학회, 서클 등에서 활동하며 학생 운동을 이끌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박정희 정권은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해 이를 금지하는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 먼저 박정희 정권은 1967년 6월 8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 가능 의석(재적 2/3 이상)을 확보하고자 했다. 수많은 선거 부정을 자행한 가운데 집권 공화당은 개헌 가능 의석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4·19 혁명 이후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학생들은 선거 부정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선거 직후인 6월 12일 법대생들이 먼저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벌였다. 문리대생들도 13일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벌이려 했다. 이에 학교 당국은 시위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16일까지 모든 단과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벌였다. 휴교 기간은 무기한 늘어났고 7월 5일 조기 여름 방학을 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7월 동백림(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면서 민비연을 연루시켰다. 이는 학생 운동 배후에 북한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6·8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조작이었다. 8월 21일 개강 후에도 일부 문리대생들과 법대생들은 부정 선거 규탄 대회를 가졌고, 9월 10일에는 상대생 150명이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벌였다. 학교 당국은 시위 주동 학생들을 모두 제적했다. 주동 학생 처벌 이후 부정 선거 규탄 시위는 마무리되었다.

1971년 대통령 선거를 2년 앞둔 1969년 6월경부터 박정희 정권은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했다. 학생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1969년 6월 12일 서울대학교 법대생 500여 명이 학생회 주관으로 3선 개헌에 반대하는 ‘헌정 수호 학생 총회’를 열었다. 17일 문리대생 200여 명이 학생 총회를, 19일 공대생 500여 명이 성토 대회를 각각 열었다. 이후 전국 각 대학교에서 3선 개헌에 반대하는 성토 대회와 시국 선언을 연일 계속했다. 7월 1일 8천여 명, 2일 6천여 명이 거리로 나가 경찰과 충돌하였다. 3일부터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은 휴교에 들어갔다. 7월 4일에는 중량교까지 진출하여 연좌 시위를 벌이다 학교로 돌아가는 600여 명의 공과대학 및 교양과정부 학생들을 경찰이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결국 7월 5일 문리과대학 등 7개 단과대학은 학기말 시험도 보지 못한 채 조기 방학을 했다.

폭력 진압과 조기 방학으로 학생들의 3선 개헌 반대 운동이 주춤해진 가운데 박정희

정권은 7월 8일 3선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3선 개헌을 위해 국회 표결을 시도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9월 1일 개강과 동시에 시위를 재개하였다. 이날 문리대생 300여 명은 비상 시국 선언문과 전국 대학 교수단에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한 후 “3선 개헌 결사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법대생들은 단식 선언문을 발표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상대생들도 성토 대회와 시위를 벌였다. 이 세 단과대학은 곧바로 휴교했다. 9월 2일과 4일 교양과정부와 공과대학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자, 이 단과대학들도 휴교에 들어갔다. 8일에는 사범대학까지 휴교했다. 3선 개헌 반대 운동이 격해지면서 개헌안 국회 표결 전날인 9월 13일까지 전국에서 33개 대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학교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 9월 14일 박정희 정권은 개헌안을 여당 단독 표결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 투표를 통과하였다. 학생들은 10월 23일 학교가 전면 개강할 때까지 3선 개헌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편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의 죽음을 계기로 학생들 사이에서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전태일 분신이 있는 지 닷새 후인 11월 18일 상대생 200여 명은 “기업가는 근로자의 인간적 삶의 기초를 보장하고 노동은 본래의 사명을 다하라.”고 결의한 후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다. 20일에는 법대생과 문리대생들이 이화여대생들과 함께 4·19 탑 앞에서 전태일의 추모식을 하고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의 노동 조건 개선 운동이 집단화할 조짐을 보이자 학교 당국은 11월 20일부터 조기 종강에 들어갔다. 조기 종강으로 전태일 분신과 관련한 학생들의 움직임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전태일 분신은 학생 운동과 노동 운동이 결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족, 민주와 함께 민중이 학생 운동의 이념적 지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1971년 박정희 정권은 장기 집권의 걸림돌인 학생들을 근본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학생들을 병영 안에 가두는 정책을 추진했다. 1월 27일 문교부는 대학 교련 교육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대학 교련 교육은 일반 교육을 1주에 3시간씩 총 315시간 7학점(4학년 1학기까지) 이수하고, 병영 집체 교육을 총 396시간 동안 재학생 모두가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전까지 교련 교육을 담당하던 예비역 교관을 모두 현역 장교로 바꾸게 하였다. 이와 같은 ‘대학교련교육안’은 2월 23일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학교련교육안을 정권 안보를 위한 학원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1971년 3월 2일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 이름으로 “학원 대(大)민주화 운

동 지침”을 발표하고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요구하였다.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 학생들은 교련 과목 수강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서울대학교에 현역 교관단을 파견하고 3월 15일부터 교련 교육을 실시했다. 문리대생들과 법대생들은 3월 15일 각각 학생 총회를 열고 교련 수업 거부를 결의하였다. 공과대학도 3월 말 성토 대회를 열었다. 학생들의 교련 반대 운동은 점차 가두시위로 커졌다. 4월 6일 상대생 1천여 명 가두시위를 필두로 7일 법과대학, 8일 문리과대학, 9일 사대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도 교련 반대 성토 대회를 열고 교련 수업을 거부할 것을 결의하였다. 교련 반대 운동이 격해지자 4월 13일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을 시작으로 거의 모든 단과대학이 휴교에 들어갔다.

휴교로 교련 교육을 잠시 중단하자 학생들은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명 선거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4월 14일 서울대학교 등 전국 12개 대학교 학생이 모여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을 결성하고 교련 반대 운동과 공명 선거 캠페인을 함께 벌이기로 결의했다. 공명 선거 캠페인은 주로 학생들이 선거 과정을 참관하고 이를 보고하는 형태로 했다. 대통령 선거 전날인 4월 26일 학교가 전면 개강하였으나, 선거 후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 사범대학 학생들은 참관 보고 대회를 열어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선거 관여, 자금 살포 등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4월 27일 대통령 선거를 부정, 불법, 관권 선거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명 선거 캠페인은 5월부터 부정 선거 규탄 운동으로 바뀌었다. 5월 11일 총학생회는 야당에게 5월 25일로 예정한 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17일에는 학생 27명이 야당 당사로 몰려가 농성을 벌이다가 이들 중 9명이 경찰에 구속되었다.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학생들은 구속 학생 석방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과 가두시위를 벌였다. 문교부는 5월 27일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공과대학과 교양과정부도 교수회 결의를 거쳐 6월 3일부터 휴교했다. 각 단과대학 휴교는 6월 24일까지 모두 해제했다.

1971년 여름 방학이 지나고 2학기를 시작하자 다시 교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강 신청에 임한 학생들은 교련 수강 신청을 거부하고 교련 철폐, 부정부패 규탄을 외쳤다. 성토 대회는 가두시위로 발전하였다. 10월 5일 새벽, 학생 주장에 불만을 품은 수경사 헌병대 소속 군인 22명이 고려대학교에 난입해 도서관에서 농성 중이던 고려대생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다. 10월 8일 총학생회는 “정보 정치 종결과 부패 특권층의 처단”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정보부 폐지, 군의 정치적 중립 등을 요구하였다. 13일 서울대

학교 등 전국 14개 대학교 학생회장단이 문리과대학에 모여 고려대 군 난입 규탄, 부정 부패 원흉 처단 등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14일 전국적 학생 운동 연대 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었던 전국 학생연맹 대의원대회를 급습해 학생 운동 주도 학생을 한꺼번에 연행하였다. 이어 15일에는 서울 지역에 위수령을 발동해 군 병력을 서울대학교(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 등 7개 대학교에 진주시키고, 역시 서울대학교 등 8개 대학교에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다. 학생 1,899명을 연행하고 119명을 구속하였다. 전국 23개 대학교에서 주동 학생 177명을 제적하고 동시에 강제 입영시켰다. 이념 서클 74개를 해체하고 미등록 간행물 14종을 폐간했다. 학생 운동 진영은 타격을 크게 입었다. 서울대학교도 문리대생 17명과 대학원생 3명을 포함한 59명을 학원 질서 문란을 이유로 제적하고 이들 대부분을 강제로 입영시켰다. 또한 문우회, 후진사회연구소, 낙산사회과학연구소, 사회법학회, 사회과학연구회를 비롯한 여러 비중 있는 서클들을 해체하고, 『의단』, 『전야』, 『자유의 종』, 『터』, 『화산』, 『새벽』, 『햇불』, 『향토 개척』 등 영향력이 큰 간행물을 대거 폐간시켰다. 휴업령은 10월 30일 해제되었지만 1971년 3월부터 시작한 교련 반대 운동은 이로써 막을 내렸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벌인 3선 개헌 반대 운동과 교련 반대 운동은 사회와 학원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선도적인 학생 운동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탄압과 반복되는 휴교 조치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 두 운동은 학생 운동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3선 개헌 반대 운동의 실패는 학생들이 자기반성과 함께 새로운 모색을 하게 했다. 전태일 분신을 계기로 학생 운동은 민족, 민주와 함께 민중을 이념적 지향으로 삼았다. 교련 반대 운동 과정에서 학생 운동 진영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이를 통해 학생 운동은 더욱 조직화되고 목적의식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학생 운동은 무자비한 유신 통치 아래서도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선도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

## 5) 반유신 민주화 운동

1971년 교련 반대 운동을 힘으로 진압한 박정희 정권은 학원을 넘어 전 사회를 군사적으로 장악·통제하고자 했다. 1971년 11월 13일 중앙정보부는 이른바 ‘서울대생 내

란 음모 사건'을 발표하였다. 위수령 이후 학생 시위와 관련하여 수배 중이던 이신범, 조영래 장기표, 심재권, 김근태 등 서울대생 5명이 혁명을 모의했다는 발표였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조작한 것이었다. 가상의 국가 변란 사태를 근거로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유신을 선포하여 장기 집권과 독재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1971년 위수령과 1972년 유신은 학생 운동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1960년대 학생 운동의 중심은 각종 서클과 학회였다. 서클과 학회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1971년 박정희 정권은 위수령을 발동하여 상당수 서클과 학회를 해체하고 학생 운동 주도 학생들을 체포하여 처벌한 뒤 강제 입영시켰다. 1960년대 방식의 학생 운동은 더 이상 전개하기 어려웠다. 서클과 학회가 불법화하면서 학생 운동을 주도하는 학생들은 참여 인원 부족과 함께 지적 축적의 단절을 겪었다. 그런 까닭에 학생들은 내부 학습과 수련회 등을 통해서 내적 역량을 축적해 갔다.

학생 운동 지도부가 한순간에 잡혀 들어간 공백기를 메우고 학회를 제일 먼저 재건한 조직은 한국사회연구회였다. 한국사회연구회의 점조직식 학회 관리는 유신체제 아래서 학회운영과 학생 운동의 모범이 되었다. 1973년 하반기부터 학생들은 비공개 학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유신 반대 시위를 기획했다. 1973년 10월 2일 서울대학교 문리대생 시위는 반유신 민주화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4·19 기념탑 앞에 모인 문리대생 250여 명은 비상 학생 총회를 통해 "자유 민주 체제를 확립하라."는 선언문을 낭독한 뒤 학교에서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어 10월 4일 법대생 200여 명이 교내 정의의 종 앞에 모여 유신 반대를 선언한 후 가두시위를 감행하였다. 이튿날 상대생 300여 명이 교정에 모여 15일까지 시한부 동맹 휴학을 결의하고 연좌 시위를 했다. 경찰은 학생 215명을 연행하여 23명을 구속, 9명을 불구속 입건, 61명을 구류 조치하였다. 학교 당국도 23명을 제적, 18명을 자퇴, 56명을 무기 정학을 시켰다. 이날 시작된 반유신 민주화 운동은 박정희 정권 타도와 민주 정부 수립을 처음부터 명확히 주장했다.

한번 타오른 학생들의 반유신 민주화 운동은 서울대학교를 넘어 다른 대학교로까지 번졌다. 학생들은 시위와 동맹 휴학으로 유신체제에 저항하였다. 반유신 시위는 11월에 더욱 확산하였다. 11월 초 상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교양과정부, 가정대학 학생들이 동맹 휴학하거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중순에는 농과대학, 약학대학, 치과대학, 문리대생들이 동맹 휴학과 성토 대회 등을 전개했다. 12월에도 법대생들이 성토 대회와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와 같이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자 각 단과대학은 11월 27일부터 12월 1일에 걸쳐 조기 방학에 들어갔다. 그러나 학생이 선도한 반유신 민주화 열기는 학교를 넘어 사회로 확산해 '개헌 청원 백만 인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서울대 학교 총학생회도 개헌 서명 운동을 지지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반유신 민주화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1974년 1월 8일 개헌 서명 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 조치 1호'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긴급 조치는 이미 타오르기 시작한 학생들의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중단시킬 수 없었다. 특히 1971년 위수령 때문에 군대에 끌려갔다가 제대한 복학생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1973년 11월 말부터 문리과대학의 이철, 유인태, 서중석 등은 법과대학, 상과대학 학생들과 함께 전국적인 학생 운동 조직을 결성하려 했다. 이들은 각 대학교별로 예비 시위를 벌인 뒤 1974년 4월 일제히 시위를 감행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들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한 박정희 정권은 서중석 등 주모자급 학생들을 3월 28일부터 검거하였다. 이철, 유인태 등은 체포를 피해 잠적하였다. 주도 학생들이 체포 또는 잠적하고 학교에 이미 200여 명의 사복 형사가 들어온 상황에서 시위 당일인 4월 3일 문리과대학에서는 불과 70~80명만 시위에 참여하였다.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전국 청년 학생을 조직해 유신체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겠다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 주도 학생들의 구상은 이렇게 좌절했다.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잠재울 기회를 엿보던 박정희 정권은 이 사건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이미 상황이 끝난 4월 3일 오후 10시 민청학련과 관련한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민청학련의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긴급 조치 4호'를 선포했다.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을 적색 혁명을 기도하는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배후로 2차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을 지목하였다. 총 1,024명을 수사해 그중 253명을 군법 회의에 송치하였다. 재판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인혁당 관계자 8명과 유인태, 이철, 김병곤 등 민청학련 관계자 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관련 학생을 대부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5년 2월 12일 유신 헌법 찬반 국민 투표에서 승리하자 15일 민청학련 사건 관련 학생을 석방하였다. 그러나 인혁당 관계자 8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 날인 1975년 4월 9일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였다.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에서는 사형이 집행된 이날을 '사법 사상 치욕의 날'로 선포하였다. 이 사형 집행은 흔히 '사법 살인'으로 평가된다.

'긴급 조치 4호' 발동과 민청학련 사건으로 1974년 상반기 학생 운동은 일시 위축했

다. 그러나 지하화한 점조직식 학회의 발전은 산발적이고 자연 발생적이던 학생 운동을 더 조직화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많은 학생이 구속됐지만 더 조직화한 학회 덕분에 1971년 위수령 때만큼 큰 공백은 없었다. 긴급 조치가 해제되자 1974년 하반기부터 반유신 민주화 운동과 함께 구속 학생 석방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9월 26일 총학생회가 구속 학생 석방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10월 8일 법대생들이 '헌법 개정'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 상과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문리과대학, 농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가정대학 학생들의 시위, 서명 운동, 농성 등이 이어졌다.

1975년 종합화와 함께 관악 캠퍼스에서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반유신 민주화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먼저 학생 운동을 이끌었던 학회 조직이 변했다. 특히 문리과대학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으로 나뉘자 학생들은 각 단과대학별로 학회를 재편하였다. 예를 들어 후진사회연구회는 관악 캠퍼스 이전 이후 인문대학 '역사철학회'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연구회'로 분리되었다. 기존 학회는 각 단과대학별로 학회 재건 책임자를 정했다. 이들은 대체로 위수령 때 입대했다가 복학한 학생이거나 아직까지 구속되지 않은 몇몇 학생이었다. 1975년 5월 박정희 정권이 '긴급 조치 9호'를 선포하고 학생회를 해체하자 학생 운동은 학회를 중심으로 더욱 은밀하게 조직되었다. 학회는 학생을 내부에서 교육하고 학생 운동 주도 세력을 재생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단과대학을 넘어서는 각종 집회나 시위를 직접 계획하고 학생들을 동원하는 역할까지 하였다. 학습, 운동, 동원 조직이 철저하게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1980년대 중반까지 학생 운동 조직의 근간을 이루던 '패밀리' 체계의 초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학회는 형식상 등록한 학회와 이념 학습과 운동을 주도하는 지하 서클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10여 개의 지하 서클은 서클 연합 조직으로 서로 연결되었다. 형식상 학회는 1학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데 이용했다. 1학년 2학기쯤 되면 건실한 후배들을 골라 지하 서클에서 집중적인 세미나와 함께 수련회, 농활, 공활 등을 실시했다. 학회 운영 책임자는 3학년이 맡았는데 가능한 한 시위를 주도하지 않고 1, 2학년들을 교육하는 데 집중하였다. 서클 연합 조직은 각 지하 서클에서 뽑힌 운동 담당자로 구성했는데 여기서는 집회 장소와 일시를 정하고 각 학회를 통해 학생을 동원했다. 아울러 정세를 분석하고 향후 학생 운동 방향과 계획을 정하기도 했다.

학회의 학습 체계를 살펴보면, 1학년들은 처음에 카(E. 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나 리영희의 『전환 시대의 논리』 같은 책으로 교양 학습을 했다. 그 후 한국 경제사, 철학, 한국 근대사, 정치 경제학 등 분야별 학습을 했다. 주요 교재는 일어로 된 『철학 개

론』, 『서양경제사』나 영어로 된 돕(Maurice Dobb)의 『자본주의 발전 연구(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ism)』 등이었다. 심화 학습을 위해 학회를 뛰어넘는 소모임을 구성하기도 했는데 거기서는 영어로 된 『자본』을 공부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1970년대 학생들은 1960년대 민족주의적 사고 틀을 확대하여 민중적이고 계급적인 틀로 사회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원전을 공부하는 것은 아직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또한 1970년대 중반부터 학교를 벗어나 노동 현장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모순을 자본주의에서 찾고 민중 지향의 운동 노선을 분명히 했는데, 공장에 직접 뛰어들거나 도시산업선교회나 가톨릭농민회 등에 참여하였다. 또한 긴급조치 9호 발동, 학내 경찰 진주, 학도호국단 부활 등으로 학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교회나 종교서클을 통해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학생들도 늘어났다. 민중신학 관련 교회들의 대학부, 흥사단아카데미 등이 주요 활동 무대였다.

종합화 직후 관악 캠퍼스에서 1975년 3월 14일 자연 계열 기초 과정 학생 300여 명의 집회를 시작으로 학원 민주화를 주장하는 각종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3월 24일 아크로폴리스에 학생 1천여 명이 모여 '학원 민주화를 위한 자유 성토 대회'를 열고 민주 학칙 제정, 석방 학생 복교, 학원 사찰 중지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 공과대학과 농과대학 캠퍼스로 이어졌다.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는 4월 더욱 가열되었다. 4월 3일 학생 2천여 명이 아크로에 모여 구속 학생 석방과 석방 학생 복교를 요구하며 신림 사거리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4일 농대생들의 시위가 있었고 7일 다시 아크로에서 비상 학생 총회를 열고 유신 헌법 철폐와 민주 헌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학교 당국은 4월 8일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이날 박정희 정권은 '긴급 조치 7호'를 발동해 고려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다음날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사형을 신속하게 집행하였다.

4월 11일 농과대학에서 학생 300여 명이 유신체제를 규탄하는 '시국 성토 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연사로 나선 4학년생 김상진이 「양심 선언문」과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장」을 낭독한 후 할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날인 12일 김상진은 끝내 숨을 거두었다. 박정희 정권은 김상진이 사망한 직후 장례식도 없이 시신을 화장하였고 학생들은 크게 분노했다. 박정희 정권은 김상진의 장례식을 금지했고 나아가 5월 13일 '긴급 조치 9호' 선포로 유신 헌법에 대한 일체의 반대 행위와 학내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김상진의 장례식을 5월 22일 아크로에서 예정대로 강

행하였다. 학생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식을 끝낸 후, 학생 약 5백 명이 교문 밖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모두 56명을 구속하였다. 긴급 조치 9호와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저항한 이날 장례식으로 서울대학교 총장이 사임했고 서울 남부경찰서장과 치안본부장은 경질되었다.

김상진 장례식 이후 학생 운동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학생 운동은 1976년 말부터 다시 기지개를 켜다. 1976년 12월 8일 4학년 법대생 3명이 「민주 구국 선언문」이라는 유인물을 뿌리고 유신 철폐, 긴급 조치 해제, 구속 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1977년 3월과 4월 관악 캠퍼스에서 몇몇 소규모 시위를 벌인 뒤, 같은 해 10월 7일 사회학과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1920년대 한국 민족 운동의 고찰’이라는 심포지엄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학교 당국은 학내 분위기를 이유로 심포지엄 연기를 종용했는데, 이에 반발한 학생 5백여 명이 학원 탄압 중지, 긴급 조치 해제, 유신 헌법 철폐 등을 외치며 강의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강의실 밖에서도 학생 1500여 명이 동조 시위를 하였다. 이 사건으로 8명이 구속되고 서울대학교는 10월 8일부터 20일 간 휴교했다. 휴교가 끝나자 몇몇 학생은 11월 11일 학생식당에서 「민주 구국 투쟁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학교에 상주한 기관원들이 이들을 곧바로 체포했지만, 이에 격분한 학생들이 가담하면서 시위는 점차 대규모로 확산하였다. 특히 이날 일부 학생들은 경찰의 연행을 피해 도서관에 들어가 장기 농성 준비를 갖춘 뒤 마이크를 이용하여 선언문을 낭독하고 반정부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위 방식이었다. 이 시위는 약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였다.

학생 시위는 1978년에 더 활발해졌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주요 대학교에서 거의 매달 반유신 시위를 벌였다. 6월 12일 학내 시위에서 주도 학생들은 1동 3층 난간에 서서 선언문을 낭독하였는데, 이후 학생들은 건물 난간을 이용하는 시위를 많이 벌였다. 학내에 형사와 전투 경찰이 상주한 상황에서, 주동자가 학생들이 모일 때까지 5분을 버틸 수 있느냐가 시위 성공의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시위가 일어날만한 건물 옥상 문은 굳게 잠겼고 중앙도서관 난관에도 곳곳에 칸막이가 설치되었다. 새로운 시위 양상은 학교 밖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1978년 6월 26일 광화문 시위는 학생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보여줬다. 이날 학생들은 경찰의 철통 같은 봉쇄를 뚫고 광화문 일대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여 박정희 정권을 놀라게 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몇 개 대학의 이념서클들이 연합한 이 시위는, 범대학적 연합투쟁의 가능성을 보였고 국민을 직접 선전 대상으로 하는 1980년대 도심 가두시위의 원형이 되었다.

1979년에도 반유신 민주화 운동은 계속되었다. 10월 19일에는 강제로 휴학을 당한 학생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관악 캠퍼스에서 벌어졌다. 박정희 정권은 마구잡이로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거나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반유신 민주화 운동은 사회 전반으로 점점 퍼져나갔다. 1979년 10월 부마 항쟁은 반유신 민주화 운동의 정점이었고, 결국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는 드디어 막을 내렸다.

반유신 민주화 운동은 1973년부터 1979년까지 끈질기게 계속한 선도적 학생 운동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경찰, 중앙정보부, 군대뿐만 아니라 긴급 조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민주적 수단까지 동원하여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지만 학생들의 저항을 막을 수 없었다. 오히려 학생들은 더욱더 은밀하고 조직적인 학생 운동 체계와 다양한 시위 방법으로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에 대항했다.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은 학생 운동을 더욱 단련시키고 성장시켰다. 민주주의를 향한 학생들의 열정과 희생은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박정희 정권은 내부에서 붕괴했지만 그 붕괴를 가속화한 것은 학생과 시민들의 반유신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반유신 민주화 운동은 성공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물러간 자리에 곧바로 새로운 군사 정권이 들어서 많은 학생과 시민을 더욱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에 맞서 학생 운동은 소수 학생들의 선도적인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많은 학생들의 대중적인 참여에 기반하여 군사 정권에 대항했다.

### 제3절 ‘대중적’ 학생 운동의 발전(1979~1996년)

#### 1) ‘서울의 봄’ 과 ‘서울역 회군’

유신체제 아래 억눌리던 학생들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학원과 사회 민주화를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1980년 1월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교는 반유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제적된 학생들의 복교를 결정하고, 이른바 ‘정치 교수’로 낙인찍어 교단에서 내몰았던 해직 교수도 복직시켰다.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와 ‘학생 활동 자율화’ 등을 당면한 운동 방향으로 정하고 ‘학생회부활추진위원회’를 통해 학내 운동 역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1980년 3월 28일 서울대에서 1975년 이후 처음

으로 총학생회가 출범하였다. 또한 4월 말에는 정권의 안보 논리에 맞서 병영 집체 훈련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운동 방법을 둘러싸고 두 가지 주장이 맞섰다. 하나는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투쟁론'이었다. 단계적 투쟁론을 주장하는 학생들은 국민이 아직 신군부 동향을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신군부가 정권 찬탈 시도를 가시화할 것이므로 그때 전면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학기 초에는 극한적 투쟁을 피하고 학내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여 학생 운동의 대중 역량을 확보한 다음 점차 정치적 문제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보았다. 다른 하나는 1970년대 학생 운동을 주도하던 복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 투쟁론'이었다. '전면적 투쟁론'을 주장하는 학생들은 이미 재야와 연대하여 1979년 11월 24일 소위 'YMCA 위장 결혼 사건'을 통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출 분쇄", "유신 독재 완전타도" 등을 주장한 바 있었다. 또한 학생 운동이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적 요구를 전면으로 내걸고 적극적인 가두 정치 운동을 벌여야만, 유신 잔재를 청산하고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1980년 4월 이후 전두환과 신군부의 정권 장악 음모가 더욱 노골화하자 학생 운동 전반에서 전면적 투쟁론이 힘을 얻었다. 그리하여 1980년 5월 2일 서울대에서 열린 '민주화를 위한 시국 성토 대회' 이후 각 대학교로 신군부에 저항하는 시위가 확산되었다. 학생들은 "비상계엄 해제", "전두환 퇴진", "구속 인사 석방" 등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가두로 진출하였다. 신군부의 쿠데타설, 학원 점령설 등이 유포되면서 당시 학생 운동 지도부였던 각 대학교 총학생회장단은, 군부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 투쟁이나 아니면 역량 보존을 위한 전술적 후퇴냐 하는 기로에서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5월 10일 전국 23개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13일 서울 지역 총학생회장단이 전면적인 가두시위를 결정했다. 다음날 전국적으로 학생 6만 명이 가두시위를 벌였다. 5월 15일에는 전국 60여 개 대학교 학생 수십만 명이 곳곳에서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였다. 특히 서울에서는 학생 10만, 시민 30만이 서울역 광장을 뺨뺨이 메우고 "계엄 철폐"를 외치면서 연좌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총학생회장단은 군부에게 쿠데타의 빌미를 주지 않고 학생 운동 역량을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좌 시위를 풀고 자진 해산하였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 전술적 후퇴를 훗날 학생들은 "서울역 회군"이라고 불렀다. 서울역 회군 직후 5월 17일에 전두환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이미 전술적으로 후퇴한 학생들은 쿠데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1980년 3월 이후 집회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상계엄이 확대될 경우 학

과를 중심으로 이미 결성한 비상연락망을 통해 바로 시위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지만, 5월 18일 1차 집결지인 서울역, 2차 집결지인 영등포역 시위는 산발적인 시위에 그치고 말았다. 쿠데타와 함께 학교는 휴교했으며 어렵게 재건한 학생회는 곧 해체했다. ‘서울의 봄’ 동안 이룩한 민주화 성과는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역 회군’은 당시 학생 운동 지도부가 이른바 ‘대기주의’에 빠진 채 학생 운동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 2) 5·18 광주 항쟁과 ‘무림-학림 논쟁’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회군과 17일 휴교령 때문에 학생 운동은 다시 지하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광주 지역은 전남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5·17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를 계속했다. 18일 계엄군이 전남대생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5·18 광주 항쟁이 일어났다. 27일까지 무려 5천 명이 넘는 광주 지역 학생과 시민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희생당했다. 광주 항쟁을 진압한 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다. 학생 운동 진영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의 움직임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다.

하지만 5·18 광주 항쟁은 이후 학생 운동의 발전에서 커다란 밑거름이자 동력이 되었다. 쿠데타와 광주 학살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처음부터 정통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 학생들에게 전두환 정권은 타도 대상일 뿐이었다. 또한 광주의 비극은 전두환 정권의 ‘원죄’인 동시에 쿠데타에 굴복해 무기력하게 후퇴한 학생들의 ‘원죄’이기도 했다. 1980년대 학생들은 광주 항쟁 당시 상황을 찍은 비디오를 돌려 보며 정권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반성, 그리고 운동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한마디로 ‘광주’는 1980년대 학생 운동의 상징이었다.

5·18 광주 항쟁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반미 감정’이 퍼져나갔다. 1970년대까지 학생들은 미국을 한국 민주화의 지원자로 생각하고 독재 정권과 미국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경향이 강했다. 5·18 광주 항쟁 당시 광주의 학생과 시민도 미국의 항공모함 파견을 자신들의 고립된 투쟁을 지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광주의 학생과 시민을 도와주기는커녕 계엄군의 무력 진압을 승인하고 전두환 정권을 지지했다. 5·18 광주 항쟁 이후 많은 학생들은 미국을 민주화의 지원자가 아니라 모순의 근원이자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이를 계기로 ‘반미’는 1980년대 학생 운

등에서 주요한 화두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광주의 비극을 교훈 삼아 사회 모순의 본질과 성격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학생 운동을 과학적으로 전개하고자 했다. 1980년대 학생 운동에서도 하나의 화두는 바로 ‘과학’이었다. 사회 과학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의 원전 학습도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과학적 인식과 실천을 둘러싼 학생 운동 내의 노선 논쟁도 본격화되었다.

학생 운동 진영은 1984년 학생회를 재건할 때까지 최소한의 교육과 실천을 보장하기 위하여 ‘패밀리’라는 독특한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 1980년대 전반기 서울대 학생 운동은 문화패들이나 ‘5대 패밀리’라 부르던 이념 서클이 주도했다. 당시 패밀리와 학회는 학생들을 이중으로 의식화했다. 패밀리는 비공개 조직이지만 학회는 공개 조직이었고, 패밀리는 학회, 서클 등을 포괄하고 매개하는 기능을 했다. 학회의 지도는 보통 패밀리에 몸담고 있는 선배가 담당했는데, 그들은 학회에서 눈에 띄는 후배들을 패밀리로 끌어들이었다. 한 패밀리 안에도 여러 학습 단위가 있었는데, 1학년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사를 공부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철학, 정치 경제학, 경제사, 세계 경제론, 운동사, 혁명사, 운동론 등을 공부하였다. 패밀리는 비밀스럽게 운영했기 때문에 같은 패밀리에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서로 모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패밀리와 학회의 이중 구조는 1980~1984년에 이르는 억압적인 정치 상황에서 학생 운동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유용한 구조였다.

휴교령이 끝나고 1980년 9월 개강했지만, 유신 시절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많은 기관원이 학교에 상주하였다. 한동안 학생들은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 12월 11일 관악 캠퍼스 학생식당 앞에서 약 1천여 명의 학생이 「반제 반파쇼 투쟁 선언」을 발표하고 시위를 벌였다. 5·18 광주 항쟁 이후 최초로 벌인 시위였다. 이 시위로 1977년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 온 한국사회연구회 중심의 언더지도부 90여명이 구속 내지 강제 징집되었고, 경찰은 이들을 ‘안개 속의 서울대 학생 운동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무림(霧林)’으로 불렀다.

1981년에 들어와 서울대생은 더욱 활발한 학생 운동을 벌였다. 특히 ‘무림’보다 조직적이고 전투적인 ‘전국민주학생연맹’(이하 전민학련)이 조직되면서 시위는 더 활발해졌다. 1981년 3월 19일 학생회관 4층 옥상에서 화성기와 횃불을 든 학생 2명이 구호를 외치자 순식간에 모여든 학생 1천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구호는 “살인마 전두환 타도”, “파쇼 독재 정권 타도”였다. 5월 27일 사회과학대학에서 열 예정이던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위령제'를 경찰이 저지하자 1천 명이 침묵 시위를 벌였다. 이때 김태훈(경제학과 4학년)이 도서관에서 “전두환 물러가라”고 외치며 투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김태훈 주변에 학생이 모여들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았고 격앙한 학생들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김태훈의 투신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광주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김태훈의 투신 당일 경찰이 행한 무자비한 대응은 이후 학생 운동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하지만 1981년의 학생 운동은 6월 10일 홍사단 아카데미 계열의 전민학련 지도부 30명이 연행되면서 일단 주춤한다. 경찰은 당시 이들을 같이 연루된 노동자 그룹과 구별하여 ‘학생 측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학림(學林)’으로 불렀다.

5·18 광주 항쟁 이후 학생 운동이 더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생 운동 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경찰이 학생 운동 주도 학생들을 검거하면서 이름 붙인 무림 사건, 학림 사건이라는 이름 때문에 흔히 ‘무림-학림 논쟁’으로 부른다. ‘무림’은 노동 운동 등 기층 민중 운동이 아직 낮은 수준이고 지도력도 부재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정치 투쟁 역량이 있는 학생 운동은 산발적이고 소모적인 시위 만능주의를 지양하고 학생 운동의 내적 준비와 대중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를 비판하는 ‘학림’은 학생 운동은 선도적 문제 제기 세력이며, 노동 운동은 주도적 문제 해결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민중 운동이 취약하고 운동의 전체적 분위가 침체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직화한 학생 운동이 지속적인 시위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체적인 투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핵심 학생들은 모두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양측은 소책자를 만들어 서로 비판과 반비판을 하며 논쟁을 계속했다. 논쟁 과정에서 학생 대중 조직(학도호국단, 씨클, 학회 등)의 확보와 활성화, 지속적인 정치 투쟁(학내 시위 및 가두시위), 그리고 학생 운동 출신 활동가의 야학과 노동 현장으로 대거 이전 등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초 무림-학림 논쟁은 학생 운동의 과학적 정세 인식과 방향 모색 과정에서 발생했다. 양측의 인식이 아직 체계화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이후 학생 운동이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학생 운동 노선을 둘러싼 논쟁은 훨씬 깊어진다.

### 3) 학원자율화조치와 학생 운동의 조직화

전두환 정권은 집권 초기 학생 운동을 강하게 탄압하였다. 1983년 5월 24일 학생 1천여 명이 벌인 교내 시위 당시 진압을 위해 학교 안에 투입한 경찰이 인문대학과 사회과 학대학 건물을 포위하고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각 학과 사무실과 교수 연구실 문까지 부수고 진입하여 숨어 있는 학생을 연행하였다. 또 항의하는 조교들을 폭행하고 교수들에게 폭언과 함께 심한 인격적 모욕을 가했다. 이날 모두 465명이 연행되었고, 그 가운데 4명이 구속, 18명이 강제 징집, 2명이 무기 정학을 당했다. 이 사건은 평소 시위에 소극적이던 학생들에게까지 큰 충격을 주었다.

1983년 말부터 전두환 정권의 태도가 달라졌다. 정부는 1983년 12월 21일 ‘학원자율화조치’를 발표하였다. 학생 운동 때문에 제적당한 학생의 석방과 복교의 길이 열렸다. 12월 29일에는 학교에 상주하던 사복 경찰이 완전히 철수했다. 1983년 말부터 시작된 학원자율화조치는 1984년 ‘유화 국면’을 조성하였다. 유화 국면은 상대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든 전두환 정권이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호의적인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1985년으로 예정한 총선거에 대비하여 민심을 수습하려고 조성한 것이었다. 1984년 학생 운동 진영은 한편으로는 유화 국면을 이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화 국면의 기만성을 알리려고 학원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갔다. 학원 민주화 운동의 결과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을 해체시키고 학생회를 재건하였다.

1984년 학생회 재건은 학생 운동 대중화의 전환점이었다. 특히 학생회의 학생 동원력은 대중적 학생 운동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했다. 1984년 학생회를 재건한 뒤 그 동안 학생 운동의 중심이던 패밀리는 점차 해체하기 시작하여 1986년 경 완전히 소멸하였다. 해체한 패밀리는 공개 서클로 전화하여 동아리연합회에 들어가거나, 독자적인 노선의 정파로 자리 잡았다. 패밀리가 해체하고 학과 단위 학회가 늘어났지만 학회와 다른 ‘언더 학습팀’은 여전히 있었다.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학생회-정파-언더 학습팀-학회’로 이어지는 학생 운동의 복잡한 구조는 이때부터 등장했다.

학생회를 막 재건하던 1984년 9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일어났다. 9월 17일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기관지 『전진』의 창간호 발간 대회를 끝낸 뒤 복학생협의회는 가짜 학생 한 명을 적발했다. 총학생회 선거 유세일인 21일과 27일에도 계속 가짜 학생들을 적발했다. 당시 학내에 ‘프락치’라고 부르는 사찰 기관의 정보 수집자가 학생으로 가장하

여 학생 동향을 파악하는 일이 많았다. 복학생협의회 학생들은 붙잡은 가짜 학생이 프락치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후 그 가짜 학생들은 학생들이 조사 도중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으로 당시 복학생협의회 의장 유시민(경제학과 78학번) 등 9명이 구속, 수배를 당했고 학생대표 백태웅 등 관련 학생 7명이 제적당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징계조치 철회를 주장하며 10월 중순 중간고사를 거부하였다. 이에 정부는 시험을 치르는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0월 24일 약 6,500명이나 되는 경찰을 학교에 투입하였다. 그 동안 불안하게 유지하던 학원자율화조치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전두환 정권의 학원자율화조치 철회에 맞서 학생들은 각 대학교를 포괄하는 학생 운동 연합 조직을 만들어 더 체계적인 학생 운동을 벌였다. 11월 3일 ‘학생의 날’에는 전국 42개 대학교 학생 2천여 명이 연세대학교에 모여 사회 민주화 운동을 통일적으로 벌이기 위한 선도적 투쟁 조직으로 ‘민주화투쟁학생연합’ (이하 민투학련)을 결성하였다. 서울대생 최형두(사회학과 81학번)가 의장을 맡은 민투학련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84년 11월 14일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 당사를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했다. 1985년 2월 12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크게 약진하자 학생 운동은 더 활성화했다. 1985년 4월 17일 각 대학교 학생 운동 세력은 ‘전국학생총연합’ (이하 전학련)이라는 연합 조직을 결성하고 의장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민석(정치학과 4학년)을 선출하였다. 또한 전학련 산하에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위원회’ (이하 삼민투)라는 공개 투쟁 조직을 만들었다. 이전부터 이어지던 학생 운동의 민족, 민주, 민중 이념은 1980년대 학생 운동의 조직화, 과학화, 대중화 과정에서 더 뚜렷해졌다. 이러한 ‘전학련-삼민투’ 체제는 당시 학생 운동 노선 논쟁의 타협물이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과감한 정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합법 투쟁 위원회를 강조하는 입장(‘깃발’)과, 총선 후 유화 국면은 장기화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학내 대중 조직인 학생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중심으로 공개적인 정치 투쟁을 하자는 기존 학생 운동 지도부의 입장(‘반깃발’)이 논쟁 끝에 전학련-삼민투 체제로 귀결된 것이다.

전학련-삼민투 체제 아래서 학생 운동은 학교 안 문제보다 ‘광주 문제’, ‘미국 문제’, ‘헌법 개정 문제’ 등 정치 사회적 문제에 집중했다. 1985년 5월 10일 학생들은 ‘광주 항쟁 진상 규명 대회’를 열고 다음날부터 ‘광주 항쟁 피해 보상 및 진상 규명 요구를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15일에는 전국 29개 대학교 학생 1만여 명이 “광주 사태 진

상 규명 및 책임자 처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23일 삼민투 산하 ‘뽕주학살원흉처단투쟁위원회’ 소속 서울대 등 5개 대학교 학생 73명이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하여 26일까지 농성을 벌였다. 서울대생 함운경(물리학과 82학번)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7월 20일 정부는 미문화원 사건 관련 학생의 징계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서울대학교 총장을 경질했다. 또 전학련-삼민투 체제 아래서 학생 운동이 격해지자 학원안정법을 제정하여 학생 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다. 이에 모든 민주화 운동 세력은 1985년 7월 ‘민중민주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공동 대응하였다. 서울대학교 학생도 8월 16일 ‘학원안정법저지결사투쟁위원회’를 만들었다. 학생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결국 학원안정법 제정을 보류하였다. 그러나 1985년 10월 29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이하 민주위) 소속 학생 26명이 구속당하는 등 학생 운동에 대한 탄압이 이어졌다.

학생 운동 노선을 둘러싼 논쟁도 더 깊어졌다. 당시 서울대를 중심으로 조직한 민주위는 팸플릿 『깃발』에서 “비합법 기간 조직-반합법 투쟁 조직-합법 대중 조직”의 조직 구도를 제기하며 목적의식적 운동, 조직적 운동을 주장하였다. 민주위의 주장은 학생 운동의 대중성보다 선도성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위의 주장을 많이 반영한 전학련-삼민투 체제 역시 학생 대중보다는 활동가를 중심으로 하였다. 학생회를 재건해 대중적 학생 운동의 기반을 마련했으나 학생 운동에서 학생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았다. 또한 1985년 하반기부터 개헌 투쟁의 목표와 새 헌법 제정 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 점차 한국 사회 변혁 노선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그동안 학생 운동의 주요 노선이던 ‘삼민 이념-민족 민주 혁명 노선’(NDR)이 점차 ‘반제 민족 해방 민중 민주 혁명 노선’(AINLPDR)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노선 논쟁은 학생 운동 조직의 분화와 재편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학생 운동은 서클 중심 경향을 극복하고 한 차원 높은 조직 체계를 만들었다.

학생 운동 내부의 노선 논쟁과 조직 재편 결과 학생들은 1986년 ‘구학련-자민투’와 ‘전민학련-민민투’로 나뉘어 결집하였다. ‘구국학생연맹’(이하 구학련)은 1986년 3월 29일 학생 100여 명이 서울대에 모여 결성한 비공개 투쟁 조직이었다. 구학련은 ‘민족 해방 민중 민주 혁명 노선’(NLPDR)에 따라 1986년 반미 운동을 주도하였다. 4월 19일 구학련은 산하 공개 투쟁 조직으로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이하 자민투)를 결성하고 기관지 『해방 선언』을 발간하였다. 반면 기존 ‘민족 민주 혁명 노선’(NDR)을 고수하는 학생들은 ‘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이하 전민학련)을 결성하였

다. 또한 산하 공개 투쟁 조직으로 ‘반제반과소민족민주투쟁위원회’(이하 민민투)를 별도로 구성하고 기관지 『민족 민주 선언』을 발행하였다. 구학련-자민투는 “반전 반핵 양키고 흙”의 슬로건을 선명하게 내걸고 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민주적 개헌을 지지하였다. 전민학련-민민투는 “헌법 제정 민중 의회 소집”을 개헌 투쟁의 기본 노선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자를 “민족 해방(NL)” 진영, 후자를 “제헌 의회(CA)” 진영이라고 불렀다. 서울대는 1985년까지 CA 진영이 강했으나 1986년 이후 NL 진영이 우세했다.

자민투와 민민투 결성 이후 1986년 학생 운동은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1986년 4월 28일 전방 입소 거부 시위를 주도하던 반전반핵투쟁위원장 이재호(정치학과 83학번)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김세진(미생물학과 83학번)이 “양키의 용병 교육 전방 입소 결사 반대”와 “한반도 핵 기지화 반대”를 외치며 분신하였다. 5월 20일 아크로에서 문익환 목사의 강연이 열리는 도중 이동수(원예학과 83학번)가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고 외치며 학생회관에서 분신 뒤 투신하였다. 같은 달 박혜정(국문학과 83학번)도 “회색인간”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한강 대교에서 투신하였다. 연이은 분신과 투신은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이들의 희생은 학교 안팎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학생 운동에 큰 자극이 되었다.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신민당이 개최한 ‘개헌 현판식’에 학생, 노동자, 시민 등 3만 명이 결집하여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전두환 정권은 이날 집회와 시위를 빌미로 학생 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자민투를 중심으로 한 NL 진영은 10월 28일 건국대에서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이하 애학투련)을 발족시켜 정권의 탄압을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했다. 그러나 발족식 당일 경찰은 애학투련 학생들을 건국대 도서관에 가두고 참가자 1,529명 전원을 강제 연행하여 그중 1,290명을 구속했다. 이 사건을 흔히 “건대 사태”라고 부른다.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강경한 진압과 처벌로 학생 운동은 커다란 손실을 입었고 회복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1983년 말 학원자율화조치와 1984년 학생회 재건으로 학생 운동은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학생 운동은 과학적인 인식과 노선을 강조하면서 노선 논쟁과 조직 분화, 재편을 거듭했다. 그 결과 학생 운동 세력은 NL 진영과 CA 진영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재편하고 각종 투쟁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투쟁과 소모적인 논쟁은 학생 운동의 발전에 장애였다. 또한 학생회 재건 뒤에도 학생 운동에서 학생회가 차지

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았다. 학생회의 재건과 학과 단위 학회의 발전으로 대중적 학생 운동을 전개할 기반은 닦았으나 학생 운동은 아직 학생 대중에게 뿌리내리지 못했다. 학생 운동은 여전히 합법-비합법 투쟁 조직 중심이었다. 대중적 학생 운동은 1987년 6·10 항쟁에 가서야 비로소 폭발적으로 전개된다.

#### 4)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6·10 항쟁

1986년 10월 건대 사태 이후 학생 운동이 침체하자 당시 모든 민주화 운동 세력이 요구한 개헌 추진도 어려워졌다. 1987년 1월 전두환 대통령은 신년 국정 연설에서 합의 개헌을 할 수 없으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언급하여 민주화 운동 세력을 더욱 압박하였다. 하지만 수세에 몰리던 민주화 운동 세력은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언어학과 84학번)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다시 결집하였다. 박종철의 죽음은 6·10 항쟁과 직선제 개헌의 직접적인 원동력이었다.

1987년 1월 14일 새벽 경찰은 박종철을 하숙집에서 남영동 대공 분실로 연행하였다. 경찰은 박종철에게서 당시 민주위 사건으로 수배 중인 박종운의 소재를 자백받으려 물고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박종철이 사망했다. 박종철 사망 뒤 경찰은 처음에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고 발표했다가, 부검 결과 온 몸에 고문 흔적이 분명하게 나타나자 결국 19일 경찰관 두 명이 박종철에게 물고문을 하여 사망했다고 시인했다. 정부는 다음날 내무부 장관과 치안본부장을 경질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습책으로 박종철 고문치사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1월 20일 서울대에서는 ‘고(故) 민주 투사 박종철 학우 추모제 및 살인 정권 타도를 위한 쫓겨 대회’가 열렸다. 27일 재야 단체를 중심으로 ‘고(故)박종철국민추도위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박종철의 49제인 2월 7일 대규모 추모제를 명동성당에서 열기로 하였다. 2월 5일 관악 캠퍼스에서 학생 약 400여 명이 모여 총학생회 주최로 쫓겨 대회를 했고, 교수 100여 명도 이날 밤 9시까지 연구실을 지키며 박종철을 애도하는 의식을 가졌다. 비록 2월 7일 추모제는 경찰의 원천 봉쇄로 열지 못했으나 학생들은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2월 26일에 열린 졸업식에서 학생들은 박종철을 추모하는 상장(喪章)을 만들고 리본을 달고 시위를 벌였으며, 문교부 장관이 축사를 낭독하자 졸업생 대부분이 일제히 야유를 보내며 퇴장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4·13 호헌조치는 박군 고문치사를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학생과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 조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바라던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5월 1일 서울대 교수 122명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여 정부의 호헌 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총학생회도 5월 7일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 각 계층에서 ‘호헌 철폐’의 요구가 봇물 터진 듯 쏟아졌다. 그런데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거행한 ‘5·18 희생자 추모 미사’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경찰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고문에 참여한 경찰의 수가 훨씬 많았고 사건 은폐에 경찰 수뇌부까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쌓인 학생과 시민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였다. 5월 25일 총학생회는 무기한 수업 거부와 단식 농성을 하기로 결정했다. 5월 27일 학생 8천여 명은 29일까지 동맹 휴업을 할 것을 결의한 뒤 2천여 명이 신림동까지 나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후 시위는 각 대학교로 퍼져나갔고,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고 의식 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1987년 6월 10일 전국 각지에서 ‘박종철 고문 살인 은폐 조작 규탄 및 민주 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 대회’가 열렸다. 서울대생 5천여 명도 아크로에서 출정식을 갖고 시청, 한국은행, 서울역, 청계천 등을 옮겨 다니며 밤늦게까지 시위를 벌였다. 전국 22개 도시에서 24만 명이 참여한 이날 시위는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명동성당 부근에서 연일 시위가 이어졌는데,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거리에 나온 회사원 등 ‘화이트칼라’ 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6월 19일 학교 당국이 조기 방학을 결정했지만, 이에 맞서 학생 1만여 명은 아크로에서 집회를 갖은 뒤 스크림을 짜고 교내 시위를 벌였다. 또한 자연과학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5천여 명은 도서관을 점거하고 그중 2천여 명은 철야 농성을 했다. 6월 26일 2천여 명의 학생이 아크로에서 출정식을 갖고 서울역과 서부역 등 도심으로 진출하여 최루탄을 난사하는 경찰에 맞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성난 학생과 시민의 저항에 직면한 전두환 정권은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개헌 등 8개 항의 시국 수습 방안(6·29 선언)을 발표하여 일단 백기를 들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6·10 항쟁이 학생과 시민의 참여로 직선제 개헌이라는 큰 열매를 맺은 것이다. 학생 운동은 6·10 항쟁을 통해 4·19 혁명 이후 다시 한 번 값진 승리를 거뒀다.

6·10 항쟁 과정에서 학생회는 학생들의 분출하는 민주화 의지를 담은 그릇이었다. 6·10 항쟁에서 분출한 학생들의 민주화 의지는 이전의 협소한 투쟁 조직 체계나 몇몇

활동가 조직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이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는 오직 학생회밖에 없었다. 실제로 6·10 항쟁에서 대다수 학생은 학생회 깃발 아래 모여 엄청난 규모의 대중적 학생 운동을 전개하였다. 6·10 항쟁에서 학생회가 큰 위력을 발휘하자 각 학생 운동 진영은 학생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제 학생회는 학생 운동의 중심 기구가 되었다. 1984년 학생회 부활과 함께 기반을 마련한 대중적 학생 운동은 6·10 항쟁을 통해 활성화되었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대중적 학생 운동의 강화에서 중요한 매개는 각 학과 단위로 만든 학회였다. 학생회를 처음 재건하던 때부터 학생회와 학과 단위 학회는 학생 운동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흐름 안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학생회는 학회를 기초로 학생 운동 담론을 유통시키면서 과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 학회 또한 학생회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재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신입생의 80% 이상이 학과 단위 학회에서 변혁 이론이나 비판적 사회 인식을 얻었다. 학회는 학과 선후배와 동기의 인간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학생회 활동과 대중적 학생 운동을 수행하는 기초 단위였다. 그래서 1990년대 전반기에는 학회를 “진보적 학습을 매개로 한 생활 공동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1985년 총선과 1987년 6·10 항쟁을 거치면서 학생 운동 진영이 복잡하게 나뉘는 가운데, 각 학생 운동 진영은 학회와 별도로 ‘언더 학습팀’을 만들어 활동가를 재생산했다. 독자적인 재생산 구조가 없는 정파는 일반 학회를 활동가 양성 통로로 이용하였다. 1980년대 말 학습 체계를 살펴보면, NL 진영은 1학년을 대상으로 ‘사상 서클’을, PD 진영은 ‘팀’이라는 이름의 학습 조직을 운영했다. 사상 서클은 주로 1학년 교양에 치중하고, 팀은 대개 학회 교사와 과 학생회 집행부원을 배출하는 데 치중했다. 사상 서클과 팀 체계는 1992년까지 존속했으며, 학생회와 학회가 약화하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도 유사한 학습 체계를 정파별로 지속했다. 이러한 학습 체계는 학생 운동이 대중화하는 가운데 각 학생 운동 진영이 조직을 재생산하는 방식이었다.

##### 5) 통일 운동과 1991년 5월 운동

학생회가 대중적 학생 운동의 중심 기구가 되면서 각 대학교 학생회의 연대 기구도 속속 만들어졌다. NL 진영을 중심으로 1987년 5월 8일 결성한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이하 서대협)는 비록 협의체 수준에 불과했지만, 1986년 건대 사태 이후 침체한 학생 운동을 다시 활성화해 6·10 항쟁에서 큰 역할을 했다. 6·10 항쟁 이후 NL 진영은 8월 19일 전국적 학생회 연대 조직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이하 전대협)를 건설하였다. 반면 CA 진영은 반합법 학생 지도 조직인 '민족민주투쟁학생연맹' (이하 민민학련)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각 학생 운동 진영은 직선제 개헌 이후 치른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서로 입장이 달랐다. NL 진영은 서대협을 앞세워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선거 막바지에는 서울대 NL 좌파(비주사 NL)를 중심으로 김대중-김영삼이 단일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CA 진영은 '경인지역 민민학련'이 백기완 후보를 민중 후보로 추대하였고 여기에 서울대 NL 좌파 일부가 가담하였다. 하지만 선거 결과 야권의 분열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승리하였다. 6·10 항쟁의 승리에 도취한 학생 운동 진영은 큰 충격을 받고 침체에 빠졌다. 6·10 항쟁이 민족, 민주, 민중이라는 학생 운동의 이념을 담지 못한 채 정치권의 타협 속에서 직선제 개헌 정도로 마무리되었을 때부터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1988년 통일 운동을 계기로 학생 운동은 1987년 대통령 선거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통일 운동은 1988년 3월 총학생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NL 진영의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김중기는 "김일성대학 청년 학생에게 드리는 공개 서한"이란 제목의 유세 연설을 통해 남북 학생이 함께 국토 종단 순례 대행진을 하고, 서울대학교와 김일성대학교 학생이 함께 체육 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비록 당시 총학생회 선거는 CA 진영과 NL 좌파 연합 후보가 승리하였지만, 이 선거를 계기로 NL 진영은 본격적으로 통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1988년 5월 14일 명동성당에서 연 '광주 민중 항쟁 계승 5월제'에 참가한 조성만(화학과 2학년)이 "공동 올림픽 개최", "미제 축출", "조국 통일"을 외치며 과도로 복부를 찌른 뒤 투신하였다. 조성만의 자결 투신은 막 시작한 통일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6월 10일 전대협은 김중기를 단장으로 하는 '6·10 남북학생회담대표단'을 구성하고 북한 학생과 학생 회담을 하려 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학생들이 판문점으로 가는 길을 원천 봉쇄하였다. 전대협은 8월 15일 다시 회담을 시도하였지만 역시 정부의 봉쇄로 실패하였다.

1988년 2학기 통일 운동은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988년 2학기 총학생회 선거에서 승리한 NL 진영은 9월 9일 아크로에서 '단독 올림픽 개최 및 휴교 음모 분쇄를 위한 전체 학생 총회'를 개최하였다. 88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9월

16일에도 아크로에 1천여 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매국적 단독 올림픽 규탄 및 휴교 음모 분쇄를 위한 관악 학우 2차 결의 대회'를 열었다. 통일 운동의 열기는 1989년에도 여전했다. 3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7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임수경의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이하 평양축전) 참가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서울대 생도 6월부터 평양축전 관련 집회를 자주 열었다. 6월 1일 총학생회 주최로 '제3회 단대 대항 체육 대회 및 평양축전 대표 선수 관악 선발전'을 열었고, 같은 날 음악대학 학생회 주최로 '축전 준비 기금 마련 통일 음악제'를 열었다. 7월 27일에는 '통일 천사 임수경 환영 대회'를 열었다. 이날은 약 200여 명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경찰은 노태우 정권 출범 이후 최초로 학교 안에 진입했다.

통일 운동이 뜨겁게 전개되었지만 학생 운동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학생 운동 세력인 PD(민중민주) 진영이 등장하였다. 1988년 CA 진영이 다수파와 소수파로 분열하고 그 다수파가 1989년 초 NL 진영에 흡수되었다. 이러한 CA 진영의 자기 해체 이후 새롭게 PD 진영이라는 학생 운동 세력이 등장하였다. PD 진영 안에는 매우 다양한 정파들이 있었는데 주요 정파는 모두 서울대에서 만들었다. PD 진영은 분단 모순보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민족 문제보다 계급 문제를 우선시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PD 진영은 NL 진영의 통일 운동이 반공 이데올로기 극복과 노태우 정권 비판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나, 당시 한창 진행 중인 노동자 파업 등 기층 민중의 생존권 투쟁과 어떠한 연관도 맺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한마디로 NL 진영의 통일 운동은 "정세 돌출적"이라는 비판이었다. 이러한 비판의 결과 1989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에서 PD 진영은 NL 진영을 누르고 승리하였다.

1980년대 후반 통일 운동이 활성화하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계속하자 노태우 정권은 1989년부터 '공안 정국'을 조성하여 이 운동들을 탄압하였다. 특히 1990년 1월 3당 합당으로 거대여당 민자당을 만든 뒤 학생 구속이 급증하고 학생 운동에 대한 규제가 강해졌다. 이에 학생들은 1990년 5월 8일과 9일 '노동 운동 탄압 분쇄와 민자당 타도를 위한 동맹 휴업'을 벌였다. 민자당 전당 대회 당일인 5월 9일에는 아크로에서 학생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민자당 분쇄를 위한 가두 출정식'을 갖고 도심으로 진출하여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6·10 항쟁 이후 최대 규모였다. 1990년 2학기에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보안사 사찰 대상인 서울대생은 사회과학대학 125명, 인문대학 93명, 공과대학 48명, 사범대학 29명, 자연과학대학 18명 등이었고, 학번별로는 73학번부터 86학번까지 다양

했다. 폭로한 보안사 문건은 학교 안에 실제로 ‘프락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1991년 4월 26일 발생한 명지대생 강경대 사망 사건은 공안 정국 조성 이후 수세에 몰리던 학생 운동이 다시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경대는 시위 도중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서울대생 300여 명은 녹두거리에서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총학생회는 5월 1일 아크로에서 학생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살인폭력정권노태우퇴진과 전투적민중연대를 위한 총력투쟁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5월 9일 학생들은 전면 휴업을 결의하고 아크로에 7천여 명이 모여 ‘민자당 해체와 공안 통치 종식을 위한 결의 대회 출정식’을 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145개 대학이 동맹 휴업을 하고 노동 현장 100여 곳이 파업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죽음으로 노태우 정권에 저항했다. 4월 29일 박승희(전남대), 5월 1일 김영군(안동대)이 분신하는 등 4월부터 6월까지 무려 20여 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5월 25일에는 성균관대학교 김귀정이 시위 도중 토끼몰이식 진압 때문에 압사했다.

1991년 5월은 1987년 6월 이후 학생 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진 시기였다. 그러나 ‘김기설 유서 대필 사건’과 1991년 6월 3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일어난 ‘정원식 총리 밀가루 사건’은 과격한 학생 운동과 학생들의 분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켰다. 1991년 5월 학생 운동은 1987년 6월과 달리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얼마 못 가 침체하기 시작했다. 학생 운동이 침체한 다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회주의권 몰락이었다. 학생 운동이 주요한 대안으로 삼던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자 학생 운동 진영은 물론 학생들 전반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다. 대안이 사라진 상태에서 누구도 학생 운동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1992년 총선과 대선에서 NL 진영은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였고 PD 진영은 백기완 후보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선거에 임하는 학생 운동의 역량은 이미 많이 약화된 상태였으며 1987년과 같이 1992년에도 학생 운동 세력은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한마디로 ‘1991년 5월 운동’이 좌절한 뒤 학생 운동은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각 학생 운동 진영은 학생 운동의 대중성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 운동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다.

## 6) 공개적 학생 정치 조직의 등장과 5·18 학살자 처벌 운동

1991년 5월 운동이 좌절한 이후 학생 운동이 위기를 맞이하자 학생 운동 진영은 위기

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무엇보다 학생 운동을 더욱 대중화해야 했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시도했다. 하나는 학생회가 정치 사업보다 학생 복지와 같은 학내 사업에 중심을 두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과격한 학생 운동을 자제하면서 학생회와 완전히 다른 학생 정치 조직을 공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생활 학생회론', '네트워크 학생회론'으로 구체화했다. 후자는 각 정파가 학생회와 분리한 학생 정치 조직을 공개적으로 결성하여 정치 조직의 정치 활동과 학생회의 대중 활동을 함께 강화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공개적 학생 정치 조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 5월 발족한 '진보학생연합'(이하 진학련)이었다. 진학련은 PD 진영의 한 정파인 '민중당 청년학생위원회'가 민중당 해산 직후 결성한 조직이었다. 이들은 학생 운동과 학생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중 조직과 정치 조직을 나누어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사업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이나 학생 정치 조직이 전담하고, 대중 조직인 학생회는 학생들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활동만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전까지 비합법, 지하 조직을 통해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배후에서 학생회를 도구로 이용한 여러 학생 운동 정파는 진학련의 '대중 조직-정치 조직 분리론', '공개 학생 정치 조직 건설론'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다른 학생 운동 세력들은 대부분 진학련의 주장을 개량주의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후 그들도 진학련처럼 학생회와 별개의 공개 학생 정치 조직을 속속 만들었다. 각 학생 정치 조직은 스스로의 위상을 다양하게 정의했지만 실질적으로 비슷한 활동을 벌였다.

1990년대 서울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학생 정치 조직은 1993년 10월에 결성한 '21세기진보학생연합'(이하 '21세기')이었다. 서울대 NL 진영의 다수파이던 NL 좌파와 PD 진영의 주요 정파이던 'AP'(반제반파쇼) 세력이 함께 결성한 '21세기'는, 진학련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과격한 학생 운동과 NL-PD 대립 구도의 극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은 1994년에 진학련과 통합했다. 이들은 생활 학생회론, 네트워크 학생회론 등을 주장하면서 정치 사업보다 학생 자치 활동에 더 주력하였다. '21세기'는 1993년,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21세기'와 더불어 1990년대 서울대 학생 운동의 한 축을 담당한 조직은 PD 진영의 'AMC'(반제반독점) 세력이 결성한 '대장정학생연합'(이하 '대장정')이었다. 'AP'와 함께 서울대 PD 진영의 주요 정파이던 'AMC'는 1993년 공개적 학생 정치 조직 '대장정'을 건설하였다. 'AP'가 '21세기'로 재편한 뒤 '대장정'은 서울대 PD 진영의 다수파로 활동했다.

‘대장정’은 1995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에서 승리한 뒤 1997년, 2001년, 2004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또 2003년 ‘21세기’가 해체한 뒤 서울대에서 가장 큰 학생 운동 세력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1992년 대선 과정에서 AMC를 이탈한 PD 진영의 일부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1993년 ‘전국학생연대’(이하 학연)라는 학생 정치 조직을 결성하였다. ‘학연’은 비록 서울대에서 ‘21세기’와 ‘대장정’에 밀려 총학생회 선거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1999년 전국 단위 학생회 연대체인 ‘전국학생회협의회’(이하 전학협)를 조직할 정도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반면 이전까지 서울대 학생 운동을 주도하던 NL 진영은 다수파이던 NL 좌파가 이탈하고 1995년 ‘자주대오’와 ‘애국청년선봉대’로 분열하여 서울대 학생 운동에서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그 밖에도 1990년대 서울대에는 과거 CA 진영의 민민학련을 계승한 ‘젊은벗’, 학연에서 이탈한 ‘노나매기’ 등 군소 학생 정치 조직이 존재하였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치른 1993년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공개적 학생 정치 조직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선거에 무려 5개 선거 운동 본부(이하 선본)가 출마하였다. 한 선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선본은 ‘21세기’, ‘대장정’, ‘학연’, ‘NL’이었다. 선거 결과 1위는 ‘21세기’, 2위는 ‘대장정’이었다. 이후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는 적게는 4개 선본이, 많게는 7개의 선본이 출마하였다. 학생회 선거는 학생 정치 조직이 경쟁하는 무대였다. 대중적 학생 운동에서 학생회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학생 정치 조직은 학생회를 장악하여 자신의 노선을 대중적으로 관철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학생 정치 조직이 학생회 선거 승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학생들 표를 얻기 위해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하고 다른 조직을 감정적으로 비방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또한 2학기가 되면 모든 학생 정치 조직이 학생회 선거 준비에만 집중하여 학내 문제를 넘어서는 정치 사회 문제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역편향이 생겼다. 처음에 학생 정치 조직은 학생회와 다른 학생 정치 조직을 공개적으로 결성하여 학생회의 대중성과 학생 정치 조직의 정치 역량을 함께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학생회를 대중 동원과 자파 활동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을 버리지 못하여 학생회 선거에 집착했다. 그 과정에서 학생 정치 조직의 정치 활동은 학생회 선거 준비 활동으로 축소되었고, 학생회 활동은 대중 활동과 정치 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그 결과 1993년의 경우 대규모 가두시위를 거의 벌이지 못했다. 1994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지하철 파업’ 문제로 이전과 같은 가두시위가 몇 차례 있었지만, 1994년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조성된 ‘신공안 정국’은 학생 운동의 입지를 더욱 좁혔다.

하지만 1995년에 들어와 학생 운동은 '5·18 학살자 처벌 운동'을 통해 다시 큰 힘을 발휘했다. 1995년의 5·18 학살자 처벌 운동은 1994년 가을 선거 당시 각 학생 정치 조직이 보인 행태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했다. 1994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도 전년도와 같이 여러 학생 정치 조직에서 선본을 꾸려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선거 기간 동안 1980년 5·18 광주 항쟁 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검찰은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었다. 당시 각 학생 정치 조직은 학생회 선거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이 문제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이때 도서관에서 한 고학번 학생이 5·18 광주 항쟁 학살 책임자 처벌과 선거에 빠진 학생 정치 조직의 각성을 촉구하는 대중 연설을 했다. 이 사건은 학생회 장악에만 몰두하던 학생 정치 조직에 큰 충격을 주고 그동안 외면한 정치 문제를 돌아보게 했다.

1995년 7월 18일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5·18 광주 항쟁 학살 책임자들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하자, 1994년 가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운동을 전개했다. 먼저 8월 29일 교수 228명이 검찰의 불기소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9월 14일 학생들도 전체학생대표 사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5·18 총결기'를 결의하였다. 이후 각 학과 학생회에서 학생 총회를 개최하여 시국 선언서 발표와 삭발식 등을 했다. 여기에는 대학원생까지 적극 호응하였다. 9월 29일 아크로에서 문민정부 출범 이후 최대 인원인 3천여 명의 학생이 모여 '5·18 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도심으로 진출하여 다른 대학교 학생 2만여 명과 함께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동시에 29일과 30일 이들 동안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했다. 이후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5·18 학살자 처벌 운동은 10월 19일 국회에서 노태우 전(前)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드러나면서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1월 3일 총학생회는 아크로에서 6백여 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5·18 특별법 제정과 학살자와 부정 축재자 처벌을 위한 범서울대인 결의 대회'를 가졌고, 이후 다른 대학교 학생 5천여 명과 함께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또한 1995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에서 모든 선본이 선거 운동과 5·18 학살자 처벌 운동을 함께 전개하였다. 결국 1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여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게 만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학생 운동의 위기가 공공연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학생 운동 진영은 학생 운동의 대중성을 강화하여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학생회론의 등장과 공개적 학생 정치 조직 결성은 모두 학생 운동의 대중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정치 조직-대중 조직 분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회를 도구로 인식하던 학생 정치 조직들은 자신의 정치 활동을 학생회를 통해 극대화하려 했다. 학생 정치 조직들은 정치 활동의 목표를 학생회 선거 승리에 한정했고 학생회와 다른 독자적인 정치 활동을 창출하지 못했다. 학생들의 표를 얻기 위해 학생 정치 조직들이 비현실적인 복지 공약을 남발하면서 민족, 민주, 민중이라는 학생 운동 이념은 점차 퇴색했다. 반면 학생회를 학생들보다 학생 정치 조직의 의도에 따라 운영하면서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치 활동과 대중 활동 사이에서 극단적인 편향을 반복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생 운동을 주도한 학생 정치 조직과 학생회에 대해 염증을 느꼈다.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학생회 선거 투표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데서 잘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1995년 5·18 광주 학살자 처벌 운동은 예외적인 사례였다. 5·18 광주 학살자 처벌 운동은 대중적 학생 운동의 전형을 보여줬다. 각 학과 단위로 조직한 학생 총회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학생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학생들의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진행된 운동은 일반 시민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다. 대중적 학생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 형태나 활동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정치적 공감대 형성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기 내내 학생 운동의 대중성은 조금씩 약해졌다. 결국 1996년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대중적 학생 운동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 제 4 절 학생 운동의 다양화와 새로운 전망(1996~2006년)

### 1) ‘한총련 사태’와 정치 운동의 약화

1990년대 들어 사회 민주화의 진행, 동구권 몰락, ‘신세대’ 학생의 등장으로 학생 사회는 크게 변하였다. 대중적 공감대 속에서 진행하던 기존의 정치 중심 학생 운동은 학생 사회가 변하자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웠다. 학생 운동 세력들은 대중적 학생 운동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했으나 학생들은 학생 운동을 점차 외면했다. 오히려 기존의 관성을 벗지 못한 채 정치적 사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학생 운동에 대해 학생들은 거부감을 가졌다. 1990년대 후반 학생 운동은 학교 안팎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1996년 일어난 ‘한총련 사태’는 민족, 민주, 민중을 지향하는 정치 중심의 대중적 학생 운동이 붕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전대협을 계승하여 1993년 건설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은 전국 단위 학생회 연대체였다. 한총련은 산하에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 같은 지역 단위 학생회 연대체를 두고 전국 모든 대학교 학생회를 포괄하였다. 한총련은 NL 진영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NL 진영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서울대 학생 운동은 한총련 활동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

1996년 3월 29일 ‘교육 재정 확보와 김영삼 대선 자금 공개를 위한 서총련 총궐기’에서 연세대생 노수석이 사망했다. 시위 중 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1991년 5월 운동’ 때처럼 학생들의 항의 분신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미 학생 운동의 대중성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운동의 열기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곧이어 치른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집권 여당이 승리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학생 운동의 대중성이 약화된 상황을 이용하여 강경하게 학생 운동을 탄압하였다. 정권의 공세에 직면한 학생 운동 세력도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다.

1996년 8월 일어난 한총련 사태는 김영삼 정권과 학생 운동 세력들이 정면충돌한 사건이었다. 8월 12~13일 한총련 주류인 NL 진영은 연세대학교에서 ‘제6차 범청학련 통일 대축전’과 ‘제7차 범민족 대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투입해 집회를 막았다. 연세대학교 주변에서 학생과 경찰이 공방을 계속했다. 경찰은 집회 참여 학생을 학교 안에 고립시키기 위해 연세대학교를 봉쇄하였고, 8월 20일 병력을 투입하여 학생 5,500여 명을 연행하고 그중 462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NL 진영은 물론 모든 학생 운동 세력을 친북, 좌경, 폭력 세력으로 매도하였다. 대다수 학생도 한총련의 과격한 학생 운동을 비난했다.

한총련 사태 이후 수세에 몰린 학생 운동은 1997년 ‘제5기 한총련 출범식’ 과정에서 프락치로 추궁받던 한 젊은이가 사망하는 사건으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1997년 한총련 출범식 이후 정부는 한총련을 이적(利敵) 단체로 규정하고 그 동안 당선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한총련에 소속한 각 대학 학생회장을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그 결과 서울대도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많은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구속되었고, 한총련 탈퇴를 약속한 뒤에야 풀려났다. 대중적 학생 운동의 기반이던 학생회는 학생회장 당선이 곧 수배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점차 힘을 잃었다. 정부는 한총련 이외에도 여러 학생 정치 조직을 이적 단체로 규정하여 핵심 학생을 구속하였다. 이런 조직 사건에 서울대생도 다수 연루되었다.

서울대 학생 운동 세력의 다수는 한총련 주류와 거리가 있었지만, 한총련 사태는 서울대 학생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한총련 사태 직후인 1996년 9월 13일 서총련 투쟁 선포식이 진행 중이던 서울대 아크로 상공에 경찰 헬기가 나타나서 최루액을 살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불과 4백여 명의 집회 참가자를 연행하려고 4천5백여 명의 경찰이 교문 주위를 포위했으며, 무려 4대의 경찰 헬기가 집회를 해산하기 위해 공중에서 최루액을 난사했다. 학교 당국 역시 도서관과 매점, 식당을 폐쇄하면서 학생들을 밖으로 내몰았다. 경찰과 학교 당국의 이러한 과잉 행동에 이 집회에 별 관심이 없던 일반 학생까지 격분하였다. 이에 9월 20일 서울대생 3천여 명은 아크로에서 학생 총회를 갖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시국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학생 총회가 한총련 사태 이후 붕괴하기 시작한 대중적 학생 운동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아크로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수가 모인 적이 없다.

서울대 학생 운동 세력은 학생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정부 비판과 함께 한총련의 폭력적 운동 방식과 비민주적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대는 한총련 주류인 NL 진영의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한총련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전부터 상당히 강했다. 1997년 총학생회를 운영하고 있던 21세기진보학생연합(이하 '21세기')은 학생 운동의 과도한 전투성과 폭력성을 비판하면서 '비폭력 직접 행동'을 주장했다. 온건한 방식의 운동과 개인의 능동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비폭력 직접 행동은, 문제 제기는 유의미했으나 실내용이 애매하고 학생 운동의 폭력성을 과도하게 부각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1998년 상반기에는 한총련 문제를 논의하려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3번이나 열었다. 당시 PD 진영 학생 정치 조직 '대장정'이 운영하던 총학생회는 한총련의 사상적 낙후성, 조직 운영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을 비판하고, 한총련의 변화를 위해 한총련 하위 조직인 서총련 혁신안을 임시 전학대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총련은 서울대의 혁신안을 거부하고 대의원 대회를 파행으로 진행했다. 결국 1998년 5월 20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임시 전학대회에서 서총련 불신임을 의결하여 사실상 한총련을 탈퇴했다.

서울대 학생 운동의 한총련 비판은 한총련과 다른 새로운 전국 단위 학생회 연대체 구성으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PD 진영이 앞장섰다. 1997년 10월 '대장정'을 중심으로 '전국학생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출범하였고, 1999년 3월 학생연대를 중심으로 '전국대학생협의회'(이하 전학협)를 결성하였다. 연대회의는 한총련 개혁에 초점을 맞췄지만, 전학협은 "반(反)한총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총련과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이 두 조직은 서울대를 넘어서는 전국 단위 조직이지만 조직의 결성과 운영에서 서울대생의 역할이 컸다.

서울대 학생 운동이 한총련을 비판하긴 했지만 정치 중심 학생 운동이 약해진 것은 서울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치 중심 학생 운동이 약해지면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학생 운동 세력 간의 분열이 깊어졌고, 둘째, 학생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이 커졌다. 이러한 양상은 서울대 학생 운동을 더욱 위기에 빠뜨렸다.

먼저 1990년대 전반 공개적 학생 정치 조직이 등장하면서 분명해진 학생 운동의 분열 양상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속화하였다. 이전부터 서울대 학생 운동은 춘추전국(春秋戰國)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정파가 분열하고 공존하였지만, 한총련 사태 이후 대중적 학생 운동의 구심점이던 총학생회의 대표성이 약해지면서 분열은 더욱 심해졌다. 과거에는 다양한 정파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쟁을 벌이고 여기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총학생회의 이름 아래 함께 움직였다. 안에서는 격렬하게 논쟁하고 대립해도 밖으로는 총학생회의 대표성을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총련 사태 이후 총학생회의 대표성이 약해지면서 각 정파는 총학생회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9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에서 최초로 비운동권이 뽑히자 학생 운동 세력은 더 이상 총학생회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운동권 총학생회 역시 여러 학생 운동 세력을 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운영위원회는 제대로 열지 못했고 각 학생 운동 세력은 상호 논쟁 없이 독자적으로 각개 약진했다. 분열이 심해지면서 2000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에는 운동권 선본만 무려 6개가 출마하였다. 이후 운동권과 비운동권이 총학생회를 번갈아 맡았지만 총학생회는 과거와 같은 대표성을 회복하지 못했다. 대중적 학생 운동은 구심점을 잃었다.

학생 대중에게서 동떨어진 채 분열과 대립만 거듭하는 학생 운동에 대한 거부감도 커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9년 4월 지하철 파업 노동자들의 서울대 농성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당시 구조 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한 지하철 노동자들은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할 것에 대비하여 서울대로 모여들었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흔히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많은 학생이 노동자들의 학내 진입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장기 농성과 집회가 수업권을 침해하고 쓰레기가 생긴다며 항의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총학생회가 노동자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불편하지만 참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대다수 학생은 더 이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잠복한 갈등은 1999년 10월 ‘BK21 반대 총투표’에서 폭발했다. 총학생회는 BK21 사업을 신자유주의적 대학 재편 시도로 규정

하고 보름 내내 사업 반대를 학생들에게 호소했지만 투표율은 38%에 그쳤다. 곧이어 일부 학생들이 투표를 주도한 총학생회를 공격하면서 운동권과 비운동권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1999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비운동권 ‘광란의 10월’ 선본은 빈약한 선거 조직과 정책 공약에도 별다른 선거 운동 없이 비운동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선되었다. 그동안 대중적 학생 운동의 기반이었던 학생 대중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식, 그리고 친(親)운동권 정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1990년대 10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 쌓여 온 반(反)운동권 정서가 드디어 폭발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더 이상 학생 운동 세력은 학생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다. 과거에는 학생 운동에 참여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학생이 학생 사회에서 ‘아웃사이더’ 였지만, 이제 학생 운동 세력이 학생 사회의 아웃사이더가 되었다. 이렇게 정치 중심의 대중적 학생 운동은 1990년대 후반기에 급속하게 붕괴하였다.

정치 중심 학생 운동이 약해지면서 서울대 학생 운동 구도도 변화하였다. 1990년대 학생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21세기’가 2003년 공식 해체하였다. ‘21세기’는 ‘한총련’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다른 학생 운동 세력에 비해 온건하고 유연한 방식의 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한때 ‘NL과 PD’ 구도를 넘어서는 합리적 학생 운동의 전형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1세기’의 온건한 노선은 다른 학생 운동 세력들로부터 개량주의라는 비판을 받았고, 한총련 사태 이후 정치 중심 학생 운동이 약화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학생 운동 약화로 가장 온건한 학생 운동 세력이 먼저 사라졌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한총련 반대와 ‘반(反)자본’의 급진적 노선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냈던 학생연대와 전학협도 2003년 해소하였다. 2000년대 초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던 전학협은 학생 운동의 역할과 방법에 대한 노선 논쟁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해소하였다. 그 밖에 몇몇 군소 정파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반면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여러 정파 출신의 학생이 결집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국제사회주의자 그룹과 관계를 갖고 반제(反帝) 평화를 주장하는 ‘다함께’, 노동자 중심의 운동을 강조하는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반(反)신자유주의와 여성주의를 기치로 하는 ‘전국학생행진’ 등 다양한 정파가 서울대 학생 운동의 일원으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중심의 대중적 학생 운동과는 전혀 다른 경향의 학생 운동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동안 민족, 민주, 민중이라는 이념적, 정치적 지향에 가려 학생 운동의 주요 대상이 되지 못한 여

성, 교육, 인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러한 학생 운동은 과거 정치 중심 학생 운동과는 달리 학생들의 일상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서울대 학생 운동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 2) 반(反)성폭력 운동의 확산

1960년대 이후 한국 학생 운동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정치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사회 민주화가 진행되고 학생들의 탈정치 경향이 커지면서, 정치적 쟁점만을 문제 삼는 학생 운동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 거대 담론 속에서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던 학생의 일상 문제가 운동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 문제다. 1990년대 들어 사회적으로 성폭력을 가부장적 사회 구조의 문제이자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학생들도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에 발맞춰 학교 안팎에서 반(反)성폭력 운동을 전개했다. 반성폭력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학생회나 학생 정치 조직과 다른 독자적인 여성 운동 모임이 다수 탄생하였다.

학내 성폭력 문제는 1993년 자연과학대학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했다. 소송으로 이어져 결국 유죄 판결이 난 이 사건은 학교 안팎에 많은 충격을 줬다. 이어 1996년 한총련 사태 당시 진압 경찰이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1997년 약학대학 교수의 제자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반성폭력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사건들 이전에도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있었지만, 학생 운동 진영 대다수는 여성 운동, 반성폭력 운동을 부차적이고 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반성폭력 운동도 처음에는 권력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 찾기 차원에서 시작했다. 아직 일상의 가부장적 성 문화와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못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가부장적 성 문화와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전개하는 학생들이 등장했다.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1996~1997년 '사회대여학생자치회', 인문대학 페미니즘 동아리 '여우방' 등 각 단과대학별, 학과별 여성 운동 모임이 꾸려졌다. 1997년 이러한 학내 여성 모임의 연대체인 관악여성모임연대(이하 관악여모)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이후 학내 반성폭력 운동은 더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1998년은 서울대 반성폭력 운동의 대중화와 제도화 양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해였다. 이 해에 반성폭력 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했다. 하나는 학생의 자치적 질서에 기반을 둔 '자치 규약 제정 운동' 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당국과 교수를 상대로 한 '학칙 제정 운동' 이었다. 제1회 '페미니즘 문화제' 도 1998년부터 시작했다.

자치 규약 제정 운동은 공동체에서 성폭력 논의를 공론화하고 반성폭력 담론을 확산하여 성폭력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한 시도였다. 자치 규약 제정 운동의 일환으로 각 단위에서 반성폭력학생회칙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1998년 사회과학대학과 인문대학에서 각각 총투표와 '전체인문대대표자대회' (이하 전인대회) 의결을 통해 반성폭력학생회칙을 제정하였다. 자연과학대학도 총투표로 반성폭력학생회칙을 제정하려는 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반성폭력학생회칙을 제정했더라도 대중적인 논의와 합의 없이는 실효성을 얻기 어려웠다. 인문대학의 경우 16대 인문대학 학생회는 총투표 대신 전인대회에서 안건을 통과하고 차후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반성폭력학생회칙을 제정했다. 그런데 전인대회에서 학생회칙을 제정한 직후, 접수한 성폭력 사건을 학생회칙에 따라 처리하고 가해자의 '공개 실명 사과 자보' 를 5동 앞 '해방터' 에 게시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학생회칙 내용의 정당성뿐 아니라 학생 사회의 민주주의와 학생회의 대표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반성폭력학생회칙을 둘러싼 논쟁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와 '실명 공개 사과' 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과 처리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성폭력적 담론과 구조를 해체하고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시각을 드러내기 위한 원칙이었다. 실명(實名) 공개 사과는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정한 가해자가 실명 사과문을 공개 게시하는 것으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한 방법이었다. 가해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할 것을 약속하여 공동체에 존재하는 성폭력을 가시화하고 피해자 치유에 일조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명 공개 사과 자보를 본 많은 학생들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피해자 개인의 자의적, 주관적 판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비판하고, 실명 공개 사과를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폭력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논쟁과 학생들의 반발은 반성폭력 운동이 아직까지 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을 의미했다. 이런 점에서 1998년 9월에 시작한 '성폭력 해방 공간 선언 운동' 은 반성폭력 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성폭력 해방 공간 선언 운동' 은 자치 규약 제정 운동이 학생 사회에서 실효성도 없고 성폭력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하게 하지도

못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학생이 스스로를 운동의 주체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를 위해 일상의 모든 여성 억압적 행태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시하며 일상을 정치 영역으로 확대시키려 했다. 성폭력 해방 공간 선언 운동은 이전까지 단과대학별로 조직한 여성 운동 모임을 학과 단위까지 확장하는 데 기여했고 이후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으로 나아가는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8년 반성폭력 운동의 다른 한 축은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이었다.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할 필요성은 1993년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은 1997년부터 본격화했다. 1997년 총학생회 선거 당시 관악여모는 모든 선거 운동 본부(이하 선본)에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이 선거로 구성된 41대 총학생회는 산하에 '성정치위원회'를 만들었다. 관악여모 활동가들은 성정치위원회에 참여하여 학칙 제정 운동을 시작하였다.

1998년 8월 그 해 5월 일어난 성폭력 사건 가해자인 인문대학 학생이 자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애초에 인문대학 학생회가 신고받아 학생회칙에 따라 조사했으나 가해자가 실명 공개 사과를 거부하여 학생회칙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자 학생생활연구소 여학생부에 위임한 사건이었다. 이후 인문대학 교수 5명으로 구성된 '인문대 성관련학생 징계위원회'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졸업 연도까지 무기 정학 또는 자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징계를 내렸고, 결국 가해자는 자퇴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총학생회 성정치위원회는 공동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가해자 재교육 등의 조치 없이 가해자 징계에만 초점을 맞춘 교수들의 처리 방식을 비판하였다.

이어 9월에 학생생활연구소 여학생부에서 반성폭력 관련 학칙 가안 '성적괴롭힘문제 처리규정(안)', '서울대학교성문제특별위원회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성정치위원회와 관악여모는 성폭력 처리 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수 외 직원과 학생도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1998년 10월 학생 대표 2명과 본부 측 대표 2명으로 구성된 학칙 제정 논의 모임이 마련되었다. 이 모임에서 1999년 2월 학칙 초안인 '서울대학교성폭력예방과처리를위한규정(안)'을 작성하였다.

1999년 4월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활동단 '바로지금'이 결성되어 설문 조사와 공청회, 서명 운동 등을 통해 학칙 제정 논의를 대중화했다. '바로지금'의 서명 운동은 12일에서 14일까지 3일 간 4천 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하여 반성폭력 학칙 제정에 대한

학생 사회의 대중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냈다. 서명이 끝난 뒤 관악여모와 성정치위원회는 학칙 수정안을 마련하고 본부와 구체적인 협상을 벌였다. 또한 관악여모는 학칙 수정안이 법률연구소의 심의를 거치는 1년 동안 본부 앞 집회 등을 해서 학칙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고 반성폭력 학칙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결국 2000년 6월 30일 ‘서울대성희롱 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과 11월 관련 시행 세칙이 제정되었다. 또 12월 22일 ‘서울대 성희롱 성폭력상담소’가 학생생활연구소 안에 개소하였다. 초기에 서울대 성희롱 성폭력상담소는 예산이나 시설, 전문 인력 확보가 제한적이어서 업무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지만 2001년 9월 완전히 독립적인 부속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성폭력 관련 규정 제정과 상담소 설치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입해 이룬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였다. 이후 다른 대학교들도 성폭력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학생들이 참여하여 만든 서울대의 성폭력 관련 규정은 다른 학교 규정의 모델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반성폭력 운동은 학생 운동의 중요한 흐름으로 성장했다. 각 학생 단위는 학생들과 반성폭력 담론을 공유하려고 매년 반성폭력 세미나를 꾸렸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 활동 등 학생 활동 대부분에서 반성폭력 교양은 필수였다. 학생회 선거에서도 여성 관련 정책은 빠지지 않았고 여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각 단위 학생회도 늘어났다.

그러나 반성폭력 운동은 2000년대 들어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혔다. 반성폭력 운동은 학내 여성 운동 조직과 학생회의 협력 속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었지만, 기존 학생 운동 세력들은 여전히 반성폭력 운동이나 여성 운동을 부차적인 운동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일부 남성 활동가의 성폭력이 드러나면서 기존 학생 운동과 반성폭력 운동 사이에서 긴장이 생겼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 인문대학 학생회장의 성폭력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학생회장이 성폭력 가해자였을 뿐 아니라 당시 인문대학 학생회가 학생 운동 세력 중 반성폭력 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학교 안에 충격을 주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문대학 학생회가 사건을 축소하려 하면서 기존 학생 운동과 반성폭력 운동의 갈등이 커졌다. 결국 인문대학 학생회장은 자진 사퇴하였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실명 공개 사과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2001년 2학기에는 1년 전 학생회칙에 따라 처리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당시 자신의 가해 인정과 실명 공개 사과 자보 게시는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사건 전체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피해자 중심주의와 실명 공개 사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일어났다. 성폭

력 가해자의 실명 공개 사과 자보를 게시한 법과대학과 경영대학에서도 논쟁이 커졌다. 이런 논쟁들이 기본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와 실명 공개 사과에 대한 반발에서 기인했다는 점은 이전과 같았다. 그러나 성폭력을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이나 학칙을 제정한 상황에서, 학생 사회 내부의 자치적 해결보다는 법리에 입각한 법적 해결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2000년대 초의 이러한 상황은 이후 반성폭력 운동 방식의 변화를 불러왔다. 물론 각 단위에서 세미나나 강연회 등을 통해 반성폭력 문제의식을 공유하려는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기존 학생 운동과 반성폭력 운동의 긴장, 학생 자치 활동의 위축과 학생 사회의 탈정치화는 그 이상의 실질적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학생의 자치적 해결보다 법적 해결을 우선시하면서 학생회칙과 같은 학생 자치 규약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사례가 줄었고, 처리하더라도 전과 같이 공개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관악여모는 성폭력 문제 해결과 피해자 구제의 1차 책임이 학교 당국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의 기능을 보강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반성폭력 운동은 가해자 처리보다 피해자 치유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1년 10월 제4회 페미니즘 문화제에서 그 동안 반성폭력 운동이 섬세하게 짚지 못한 피해자의 경험과 고통을 드러낸 것과, 11~12월 관악여모와 학내 언론사가 함께 대학 내 성폭력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그러한 취지의 시도였다.

반성폭력 운동은 2004년 여름 농활 당시 3개 단과대학 농활대가 각각 성폭력 문제로 마을에서 철수한 것을 계기로 다시 공개적인 논쟁에 휩싸였다. 이 일은 학교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자기중심적인 학생이 농민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학생 운동 세력 중 일부는 교조적인 반성폭력 운동이 선배들이 어렵게 만든 학생과 농민의 연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각 단과대학마다 성폭력 양상과 농활대의 상황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농활과 반성폭력 운동을 단순하게 대립시킬 수는 없다. 당시 반성폭력 운동 활동가도 농활대 철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농활대 철수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많은 논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반성폭력 운동은 정치 중심 학생 운동이 약화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일상에 기반을 둔 학생 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 하지만 반성폭력 운동이 앞으로 넘어야 할 벽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성폭력을 법적 제도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위축된 학생의 자치 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같은 원칙이나 공개 실명 자보, 농활대 철수와 같은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하여 학생

들 사이의 소통이 필요하다. 더 많은 학생이 동의해야만 반성폭력 운동의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반성폭력 운동과 다른 학생 운동의 관계도 앞으로 반성폭력 운동이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민족, 민주, 민중의 기존 학생 운동 이념과 반성폭력 운동의 관계 정립이 주목된다.

### 3) 교육 자치 운동의 활성화

한총련 사태 이후 정치 중심 학생 운동이 약해지면서, 학생 운동 세력은 사회 운동과 학생 운동의 관계를 다시금 고민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학생 운동은 사회 운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1980년대 학생회 재건과 학생 운동의 대중화 과정에서 점차 그 위상이 변하였다. 특히 노동 운동과 시민 운동이 성장하면서 1990년대 등장한 학생 정치 조직들은 더이상 학생 운동이 전체 사회 운동을 선도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들은 학생 운동의 위상이 전체 사회 운동의 일부를 차지하는 ‘부문 운동’이라고 새롭게 규정하였다. 따라서 학생 운동은 자신의 독자적인 활동 영역에 기반을 둔 새로운 운동 방향과 주제를 설정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 운동의 중심은 정치 활동이었다. 학생 운동의 독자적인 영역인 ‘교육’에 대한 관심은 학생회론 또는 학내 복지를 둘러싼 논의 정도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한총련 사태는 더 이상 과거의 관성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학생 운동의 생존을 위해 기존 학생 운동 세력도 학생 운동의 독자적인 영역인 교육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교육과 자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물론 교육과 자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전반부터였다. 최초의 공개적 학생 정치 조직이던 ‘진보학생연합’ (이하 진학련)은 프랑스 1968년 혁명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대학을 비판적 지식인의 산실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들은 학생을 피교육자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학생이 대학의 주체가 되어 참여와 자치에 기반을 둔 대학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학련은 학내 복지나 행정적인 사안의 제도화 등 교육 환경 개선에만 주목한 것이 한계였고, 구체적인 활동도 식당 문제, 공간 문제, 휴식 문제 해결 정도에 그쳤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문제를 학생회와 학교 당국의 대립 구도로 제한해 교육과 자치의 문제를 학교 안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진학련의 문제의식은 서울대 최대의 학생 정치 조직인 ‘21세기’로 그대로 이어졌다. 반면 ‘대장정’은 ‘21세기’의 교육 자치 운동을 ‘조합주의’라고 비판하고 1990년대

중반 ‘反(반)대학’ 과 ‘서울 민중 대학(Seoul People’s University)’ 라는 급진적인 구호를 내걸고 대학의 모순을 사회 모순과 연결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들도 사회와 대학을 연결할 만한 구체적인 경로를 찾지 못하여 실질적인 실천을 하지는 못했다.

1990년대 이후, 특히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급속히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대학의 위상과 학생의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무한 경쟁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는 대학 사이의 경쟁, 대학 안에서 학생들 사이의 경쟁을 강조하였다. 이제 대학은 더 이상 진리의 상아탑이나 혁명의 공장이 아니었다.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으려고 대학과 학생은 시장과 자본의 논리를 충실히 따라야 했다. 한총련 사태 이후 교육과 자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 것은 정치 중심 학생 운동이 약해진 결과이자 이러한 한국 사회와 대학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였다. 학생 운동 세력은 학생들이 외면하는 추상적인 정치 운동보다 무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의 교육권과 자치권을 옹호하는 교육 자치 운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교육 자치 운동은 본질적으로 반(反)신자유주의 운동이었다.

본격적인 교육 자치 운동은 1997년 학교 당국이 만든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한 학생 지도종합계획’에 대한 반대 운동에서 시작하였다. 1997년 6월에 알려진 이 계획은 이전까지 학생들이 자유롭게 하던 대자보 게시, 플래카드 설치, 장터 개설, 서명 운동 등 광범위한 학생 활동을 반드시 학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였다. 이후 학교 곳곳에서 대자보 부착이나 장터 개설, 집회 등을 둘러싸고 학교 당국과 학생들 사이의 마찰이 자주 일어났다. 결국 총학생회는 1997년 10월 2일 아크로에서 학생 총회를 개최하여 학교 당국의 방침을 비판하고 대응책을 모색하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0월 31일에는 사범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참여한 학생 100여 명이 본부를 항의 방문하였다. 단순히 학생 활동에 대한 제한을 넘어서서 ‘비운동권 학생의 역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검토’, 『대학신문』의 운동권 논리 전파 차단, ‘상습 불순 활동 및 한총련 적극 가담 동아리의 해체 및 종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이 계획에 대해, 학생 운동 세력은 공안 정국과 신자유주의에 편승하여 학교 당국이 학생 자치권을 탄압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대체로 이 문제에 무관심했다.

1999년 BK21 반대 운동은 시장 논리로 대학을 구조 조정하려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교육 투쟁이었다. 학생 운동 세력은 BK21 사업이 대학 간, 학문 간 서열화를 강화하면서 시장 논리에 따라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하였다. 1999년 10월 총학생회는 BK21 반대 운동에 학생을 결집시키려고 찬반 총투표를 하였다. 이때 대자보와

PC 통신에서 BK21 사업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지만 투표율은 38%밖에 되지 않았다. 저조한 투표율은 BK21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대생들이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학생 운동 세력을 불신입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곧이어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에서 1984년 학생회 재건 이후 최초로 비운동권이 당선되면서 이러한 해석은 더욱 힘을 얻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문제가 된 ‘학사관리엄정화방안’ (이하 엄정화방안)에 대한 반대 운동은 BK21 반대 운동과는 달리 학생들의 폭넓은 지지 가운데서 진행되었다. 1998년 9월 엄정화방안에 대한 학생 총투표에서 대다수 학생은 엄정화방안을 반대하였다. 이에 힘입은 총학생회는 1999년 초부터 ‘엄정화방안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5월에는 총학생회가 본부를 점거하여 장기간 농성에 들어갔다. 그 결과 학교 당국은 엄정화방안을 1999년 6월 개정했다. 그러나 엄정화방안에 따른 학사 제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2000년에도 천막 농성과 본부 점거 농성이 되풀이되었다. 엄정화방안에서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상대 평가제, 재수강 시 학점 제한, 학점 2.0 이하 학사 경고, 학사 경고 4회 시 제적 조항 등이었다. 학생들은 엄정화방안이 학생들의 자율을 저해하고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학점의 굴레 안에 가두어 버린다고 비난했다. 학생 운동 세력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학점의 부담에 시달리는 일반 학생들의 불만도 많았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경쟁력 향상을 명분으로 학사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1999년과 2000년 엄정화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학교 당국과 학생들은 2001년과 2002년 모집 단위 광역화(이하 광역화) 문제로 다시 한 번 충돌하였다. 2001년부터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광역화 반대 운동’이 펼쳐나갔다. 광역화 반대 운동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학부제 경험에 기반하고 있었다. 당시 자연과학대학에서 학부제를 실시할 때만 해도 저학년 때 폭넓은 공부를 하고 고학년 때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 사이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하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인기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저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학점 경쟁을 벌이고, 학과별 지원자의 극심한 편차로 비인기 학과는 학과의 존립마저 위태로웠다. 무엇보다도 과 학생회를 기초로 한 학생회 체계가 과 학생회의 해체로 근간부터 흔들렸다. 이는 학생회뿐만 아니라 학생 운동까지 약화시켰다. 학생 운동 세력은 2001년부터 인문대학과 사범대학 등 다른 단과대학에서 학부제와 유사한 광역화를 추진하자 강하게 반발하였고 학생들 다수도 이에 동조하였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반발에 관계없이 광역화를 계속 추진하였지만, 학생들의 저항 수위는 계속 높아졌다. 2001년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총

학생회장단이 단식 투쟁을 시작했고, 17일에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아크로에서 열었다. 2002년에는 광역화 반대 운동과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을 결합하여 교육 자치 운동의 강도를 높였다. 2002년 3월 20일 총학생회는 대학본부를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했다. 3월 28일에는 아크로에서 비상 총회를 열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당국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총장실을 점거하였다. 본부와 총장실 점거 농성은 4월 8일에 끝났지만, 이 사건의 여파로 총장이 사퇴하고 총학생회장은 제적을 당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과 학교 당국의 갈등이 파국을 맞이한 것이다.

2003년과 2004년에도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이나 기성회비 사용, 도서관 이용, 김민수 교수 복직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학교 당국과 큰 마찰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2005년 교육 자치 운동은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교육 투쟁’을 전면에 내걸고 당선된 총학생회는 1월부터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을 벌였다. 또한 각 단과 대학 학생회도 다양하게 교육 자치 운동을 벌였다. 3월에 총학생회는 각 단위에서 진행한 교육 자치 운동의 역량을 한곳에 집중하기 위해 아크로에서 비상 학생 총회를 열었다. 1,700여 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분 반환, 학부 대학 및 전문 대학원 계획의 전면 재논의, 상대 평가제 철폐, 학점 취소제 쟁취, 대학운영위원회 건설 등의 주장을 채택하였다. 총회를 마친 뒤 학생 대표단은 학생처장과 면담을 하고 학생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투쟁 수위에 불만을 품은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은 잠시 대학본부 3층을 점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교 직원, 청원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 부상자가 생겨 물의를 빚었다.

2005년 하반기에는 국립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총학생회는 10월 6일 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인 행동의 날’ 집회를 갖고 집회 후 학생처장과 면담했다. 8일에는 종묘공원에서 다른 국립대학교 학생들과 연합 집회를 가졌다. 총학생회는 법인화가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 등록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직까지 법인화 반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법인화가 공식적으로 추진될 경우 등록금 인상 문제와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교육 자치 운동은 운동의 성격상 학교 당국과의 대화가 중요하다. 2002년 중반 이전까지 학생들과 학교 당국은 자주 극단적으로 대립했다. 그러나 2002년 중반 이후부터는 학생과 학교 당국의 관계가 많이 부드러워졌다. 일례로 1999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상호 불신으로 인해 무산된 총장과 학생들의 대화가 2002년 중반 이후 성사되어 지금까지

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 운동은 정치적 활동보다 학생들의 일상에 기반한 교육 자치 운동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권과 자치권 수호’, ‘신자유주의에 의한 대학 개편 반대’를 앞세운 교육 자치 운동이 보수화한 오늘날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학생 운동 세력은 먼저 학생들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당국과 상호 신뢰 속에서 관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다. 학교 당국과 학생 운동 세력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을 일방적인 학사 관리의 대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학생 운동 세력 역시 과격한 운동 방식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학교 당국과 교섭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학내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다. 학교 당국, 교수, 학생들 모두 서울대의 소중한 주체들이다.

국대안을 둘러싼 학생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설립한 서울대학교는 지난 60년 동안 학생 운동의 선두에 있었다.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1950년대까지 학생 운동은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새롭게 등장한 학생 이념 서클을 중심으로 학생 운동의 기반이 조금씩 형성되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학생 운동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후 학생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했다. 노동 운동이나 시민 운동 같은 사회 운동들이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 운동은 사회 모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치열하게 저항했다. 그 과정에서 학생 운동은 민주, 민족, 민중을 핵심 이념으로 정립했다. 1980년대 들어 학생 운동은 보다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운동을 모색했다. 그 결과 학생 운동은 학생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대중화되었다. 특히 1984년 부활한 학생회는 대중적 학생 운동의 중심 기구였다. 다른 사회 운동들이 성장하면서 학생 운동의 선도성은 점차 약화되었지만 학생 대중에 기반한 학생 운동의 힘은 더욱 강해졌다. 오늘날 민주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1987년 6·10 항쟁은 대중적 학생 운동이 이룬 값진 성과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학생 운동의 대안이었던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사회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학생 운동의 대중성은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점차 학생 운동을 외면했고 적대감마저 나타냈다. 학생 운동 세력들은 대중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학생들로부터 더욱 멀어졌다. 결국 1996년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정치 중심의 대중적 학생 운동은 붕괴했다. 반면 여성, 교육, 환경 등 학생들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영역에서 문

제를 제기하는 운동들이 성장했다. 과학 상점 운동 같이 전공에 기반한 운동이나 장애인, 동성애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소수자를 위한 인권 운동도 등장했고, 김민수 교수 복직, 이라크전 파병 반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운동도 시도되었다. 사회와 삶의 모순이 다양한 만큼 운동도 다양해진 것이다. 문제는 과거 학생 운동이 역사에 기여했듯이 오늘날 학생 운동이 어떻게 대학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이다. 신자유주의와 보수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비판 의식을 상실한 오늘, 학생 운동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대학과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이 되어야 한다.